이 자료는 2021년 8월 31일 본 브리핑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2021. 8. 27.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순 서

Ⅰ.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 1

Ⅱ. ′22년 예산안 전체모습 ····· 4

Ⅲ. 중점 투자방향 ····· 7

1. ′22년 예산안 투자방향 ····· 7

2. 4대 중점 투자분야 ····· 10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Ⅳ. 3대 재정혁신 ····· 66

Ⅴ. 분야별 재원배분 ····· 89

Ⅰ.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1. 문재인 정부 4년간 재정운용 성과

1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

○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 최대한 수행

* 일자리·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매년 추경 편성 → **'17~'21년간 9차례 추경**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본예산** 및 **6차례 긴급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이 **위기돌파·국민보호**의 **버팀목**

* ('20.1차)11.7조원, ('20.2차)12.2조원 ('20.3차)35.1조원, ('20.4차)7.8조원, ('20.12월 맞춤형 피해지원) 9.3조원, ('21.1차)14.9조원, ('21.2차) 34.9조원

2 포용국가 건설,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

○ **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20.12월), 건강보험 보장성('17년 62.7% → '22년 70%)

○ **D.N.A+BIG3**,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등 **선도경제 투자방향** 마련

* 소부장 대일의존도('19→'21년): (100대 핵심품목) 31.4→24.9%, (전체) 16.9→15.9%

○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연간 약 **8.5조원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4.3%p),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年1조원, '22~'31년) 등 추진

3 재정의 힘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호한 경제성과 창출 향후에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 회복 필요

○ **코로나 충격 최소화** 및 조속한 **위기이전 수준 회복**을 통해 **'20년 세계경제 10위권** 진입,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달성 등 성과

* 경제성장률: ('17~'20 평균) 한국 1.8% > 세계경제 1.7%, ('20) 한국 △0.9% > OECD평균 △4.5%

○ 다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된 측면** →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

* 국가채무비율(%): ('18)35.9 ('19) 37.7 ('20本/추경) 39.8/ 43.9 ('21本/추경) 47.3/ 47.3
통합재정수지(조원): ('18)31.2 ('19)△12.0 ('20本/추경)△30.5/△84.0 ('21本/추경)△75.4/△90.3

2.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❶ 당면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❷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며
❸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 구축**

1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

○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를 **최우선 지원**하여 국민들이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 예산」**

○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부문간·지역간 격차 확대** 등 **新양극화**에 **대응**하여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상생 예산」**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전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핵심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 예산」**

2 국정과제 완성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산

○ **국정과제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국민신뢰 정부**를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계획(178조원)을 초과 달성하여 공공보육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

○ **한국판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에 준하여 투자 대폭 확대**

3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

○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면서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선세수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토대** 마련

○ 더 나아가, 위기상황 속 **재정의 역할→ 경제회복 → 세수증대** →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

○ **한시지출 단계적 정상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

Ⅱ. '22년 예산안 전체모습

1 재정총량

□ (총수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22년 총수입**은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증가** ⇨ **548.8조원**(추경대비 6.7%)

- (국세) 주요 세목 세수증가로 '21년 추경(314.3조원) 대비 **+24.4조원**(7.8%)
- (국세외) 기금수입 확대로 '21년 추경(200.3조원) 대비 **+9.9조원**(5.0%)

□ (총지출)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유지** ⇨ **604.4조원**(8.3%)

- **경상성장률**(4.2%) **< 총지출 증가율**(8.3%), **5년 연속** 경상성장률 **상회**
  * 경상성장률-총지출 격차(%p): ('18)△2.6, ('19)△5.1, ('20)△5.3, ('21)△4.1, ('22)△4.1
-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한 **실질 지출 증가율**은 **11% 이상**

□ (통합재정수지) '21년^{본예산} △75.4 → '21년^{추경} △90.3 → '22년 △55.6조원으로 축소
(GDP대비 '21^{본} △3.7→ '21^{추경} △4.4→ '22안 △2.6%)

□ (국가채무) '21년 956.0 → '22년 1,068.3조원으로 증가
(GDP대비 비중 47.3 → 50.2%)

* 국가채무 순증(조원) : ('21^{본예산}) +150.8 → ('21^{추경}) +160.1 → ('22안) +112.3
* 일반회계 적자국채(조원): ('21^{본예산}) 93.5 → ('21^{추경}) 101.4 → ('22안) 77.6

(단위: 조원, %)

	'21		'22안
	본예산	2회 추경	
◇ 총 수 입	482.6	514.6	548.8
(증가율)	*(0.2)*	*(6.8)*	*(6.7*)*
◇ 총 지 출	558.0	604.9	604.4
(증가율)	*(8.9)*	*(18.1)*	*(8.3)*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GDP대비,%)	*(△3.7)*	*(△4.4)*	*(△2.6)*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GDP대비,%)	*(47.3)*	*(47.3)*	*(50.2)*

* '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1년 2차 추경 대비

2 중기('21~'25년) 재정운용계획

◇ 포용적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선제적 총량관리·재정혁신을 통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여건) '21년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에 따른 하방위험은 상존

○ 포용적 경제회복, 경제사회 구조 전환 및 선도국가 도약,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확대 전망

□ (중기총량관리)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25년 재정준칙 준수도 담보

○ (총지출증가율) '22년 8% 초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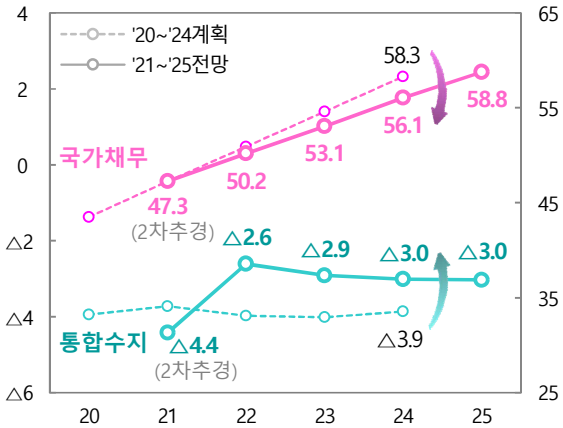
-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확대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투자 뒷받침

○ (통합수지) '21년 △4%대('21추경예산) → '22~'25년간 △2% 중반~△3% 수준으로 적자폭 축소

○ (국가채무) '25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21~'25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

(조원, %)	'21 본예산	'21 2차추경	'22	'23	'24	'25
▪ 총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 총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 통합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대비)	(△3.7)	(△4.4)	(△2.6)	(△2.9)	(△3.0)	(△3.0)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대비)	(47.3)	(47.3)	(50.2)	(53.1)	(56.1)	(58.8)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한국판 뉴딜 2.0, 탄소중립,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지방재정 **대폭 확충**

1 (환경/R&D) 탄소중립, 뉴딜 2.0 등 핵심 분야→ 12.4/8.8% 증가

○ (**환경**)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여 최고 증가율(10.6→11.9조원)

* 증가율(%): ('18) △0.3 → ('19) 7.2 → ('20) 21.8 → ('21) 17.8 → ('22안) **12.4%**

○ (**R&D**)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확대(27.4→29.8조원)

* 증가율(%): ('18) 1.1 → ('19) 4.4 → ('20) 18.0 → ('21) 13.1 → ('22안) **8.8%**

2 (보건·복지·고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8.5% 증가

○ **전국민 접종에 충분한 백신 1.7억회분, 충분한 병상**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전방위 지원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5.02%) 인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실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소득·고용안전망 확충 (199.7→216.7조원)

* 증가율(%): ('18) 11.7→ ('19) 11.3→ ('20) 12.1 → ('21) 10.6 → ('22안) **8.5%**

3 (산업·중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 등 확충 → 6.0% 증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지원, 재도약·구조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대폭 확대(28.6→30.4조원)

* 증가율(%): ('18) 1.5 → ('19) 15.1 → ('20) 26.4 → ('21) 20.8 → ('22안) **6.0%**

◇ 세수증가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22.7조원),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도입('22년 0.75조원) 등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조원)

구 분	'21년(A)	'22년 정부안(B)	증감 (B-A)	%
◆ 총지출	558.0	604.4	46.4	8.3
1. 보건·복지·고용	199.7	216.7	17.0	8.5
2. 교 육 (교부금 제외)	71.2 (18.0)	83.2 (18.9)	12.0 (0.9)	16.8 (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	64.3	11.1	20.8
3. 문화·체육·관광	8.5	8.8	0.3	3.9
4. 환 경	10.6	11.9	1.3	12.4
5. R&D	27.4	29.8	2.4	8.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0.4	1.8	6.0
7. SOC	26.5	27.5	1.0	3.8
8. 농림·수산·식품	22.7	23.4	0.7	3.4
9. 국 방	52.8	55.2	2.4	4.5
10. 외교·통일	5.7	6.0	0.3	5.7
11. 공공질서·안전	22.3	22.4	0.1	0.3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등 제외)	84.7 (32.9)	96.8 (32.7)	12.1 (△0.2)	14.3 (△0.7)
※ 지방교부세 등	51.8	64.1	12.3	23.9

Ⅲ. 중점 투자방향

1 '22년 예산안 투자방향

◇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강한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

□ (투자중점) 경제 회복, 포용적 상생, 미래대비 도약, 국민보호 강화

❶ (글로벌 강국) 견고한 회복 흐름에 기반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일자리 조기회복,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등 **경제회복 뒷받침**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SOC 고도화·첨단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❷ (新양극화 대응)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부문별 격차 축소

- 소득·고용·의료·돌봄·주거·교육·문화 등 **전부문 격차완화** 집중투자
- **맞춤형 회복·도약**으로 **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상생발전**

❸ (경제구조 대전환) 사람을 중심으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선제적 전환 추진

- **탄소중립, 디지털化, 미래산업** 육성으로 **선도형 경제 구축**
- 체계적인 **혁신형 인재양성**으로 **구조 전환**의 **인적자원 뒷받침**

❹ (국민보호·삶의질) 안전을 보장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조성

- 외교·안보, 감염병, 재난·산업재해, 생활환경 등에서 **국민안전 확보**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족·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

□ (재정혁신) 지출구조 개선, 협업·참여 중심의 예산 체계 강화

❶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시지출 정상화**로 절감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재구조화 추진**

❷ (협업예산 고도화) 부처간 협력으로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 등 **지출 효율성 제고**

❸ (국민공감 예산) **현장·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예산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예산 공감도 제고**

참 고 ’22년 예산안 전체 모습

목표 **포용적 경제회복 ·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기본 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
-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뉴딜 2.0의 성과 가시화로 미래 대비
- 세수회복력을 토대로 적극적 재정과 건전재정 기반회복 뒷받침

4대 투자중점

①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③ 탄소중립 ·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재정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 협업예산 고도화 | 국민공감 예산

【 '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250조원 수준, 중복포함) 】

[경제회복 · 양극화 대응]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 83.4조원
* 소득(16.9조원) + 고용(1.9조원) + 생활(41.3조원) + 취약계층(23.3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23.5조원
* 일자리(5.5조원) + 자산형성(1.9조원) + 주거(6.3조원) + 교육·복지·문화(9.7조원)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위기극복 · 활력회복 — 4.5조원
* 안전망(1.9조원) + 금융(1.4조원) + 구조전환(0.6조원) + 지역상권(0.6조원)



SOC 고도화 · 첨단화 프로젝트 — 3.4조원
* 교통망 확충(1.7조원) + 첨단화(1.5조원) + 스마트 시티(0.2조원)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 33.7조원
* 디지털 뉴딜(9.3조원) + 그린 뉴딜(13.3조원) + 휴먼 뉴딜(11.1조원)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6.2조원
* 뉴딜(3.6조원) + 미래주력산업(2.8조원)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원)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 2.0조원
*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인재 교육 + 직업훈련



탄소중립경제 선도 — 11.9조원
*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 저탄소 생태계(0.8조원) + 공정한 전환(0.5조원) + 제도적 기반(2.3조원)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 52.6조원
* 재정분권·재정보강 등(24.7조원) + 균형발전 인프라(12.1조원) + 지역균형뉴딜(13.1조원) + 지방소멸대응(2.7조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 21.8조원
* (자연재해 5.3조원) 풍수해 + 산림재해 + 지진
(생명보호 14.1조원) 자살 + 교통사고 +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원) 수질 + 대기 + 자원순환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5+3 지원 — 6.6조원
* 친(親)가족 5대 패키지(4.1조원) + 아동수당(2.4조원)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 4.7조원
* 봉급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귀준비금 + 주거여건

2 4대 중점 투자분야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2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1년	'22년
일자리 조기회복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40만명	50만명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1.2만명	3.1만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4만명
	공공일자리	101만개	105만개
내수 촉진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3개소	6개소
	콘텐츠 정책금융펀드	1,500억원	2,2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	3.5조원
창업·벤처	창업초기펀드	1,700억원	3,400억원
	스타트업 해외실증	-	20개사
	지역기업 스케일업 자금	-	100개사
산업혁신 백신허브	부품업계 친환경차 투자자금	-	0.2조원
	소부장특화단지	-	5개소
	K-글로벌 백신펀드	-	1조원(~'23)
SOC 고도화 첨단화	고속철도(5개노선)	3,469억원	5,156억원
	철도 IoT(누적)	1.9만개	3만개
	스마트시티 챌린지(누적)	87건	122건

1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30.1→31.3조원)

◇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를 30.1 → 31.3조원으로 확대**

◇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 지원으로 버팀목 역할 지속**

※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6조원(일반회계 1.3조원 포함) 재정보강**

○ (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 예산**을 30.1 → **31.3조원으로 확대**하고,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

부문	'21년 → '22년	주요내용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11.2조원 → 11.1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8조원(1.4→0.6조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4.0조원 → 4.6조원	유급휴가 훈련 등 노동전환 지원 등
실업소득 안정(고용안전망)	12.5조원 → 12.7조원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0.2조원 등
창업지원	2.4조원 → 3.0조원	혁신창업자금 +0.5조원 등
합 계	30.1조원 → 31.3조원	

○ (공공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 보완**을 위해 **직접일자리** 101 → **105만개 지원**

- **노인일자리**를 80 → **84.5만개***, **장애인일자리** 2.5→ **2.7만개 확대** 등 **92만개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4.5→7만개)하고, 민간 등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모델 발굴 강화

-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인원을** 5.8 → **6.6만명으로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6만개) 등을 통해 **청년대상 일자리 2.7만개** 지원, **새일센터 여성인턴 0.8만명** 지원

* 지자체 및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 병행

○ (민간 일자리)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 **106만명 취업 지원**

-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0.5조원), **SW 인력 5.9만명 양성, 일경험 지원** 등 취업역량 제고

- (**장려금**) 취약청년이 중소기업 채용시 **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4만명** 대상으로 지원 (0.5조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300만원 적립시 만기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22년에 **신규 7만명 가입 지원**
- (**직업훈련**) **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 확대**(1.7→2.9만명), 캠퍼스 SW 아카데미 신설(550명, 77억원) 등 **SW 인력 5.9만명 양성**
- (**일경험**) **청년 0.4만명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경험·직무교육 등 **청년 친화형 기업ESG 프로그램 제공**시 **비용지원**(170억원)

-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1.2→3.1만명),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서비스 강화**

- (**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年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1.2→3.1만명)
  - 최근 3년 평균 고령자 고용률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규채용시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장려금 신설** (0.6만명, 54억원)
- (**노동전환**) **유급휴가훈련**(1만명),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과정**(2.5만명) 등 재직자 대상 **직무전환 훈련 신규 지원**
  -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신설(5천명, 5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60만명**(청년 25만명)에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인원을 40→ 50만명으로 확대** (청년 10 → 17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 등 **10만명** 대상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서비스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3만명 대상으로 체험형(0.9만명) 및 인턴형(2.1만명)으로 기업 일경험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구직급여	113,486	115,339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0.2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2,101	15,141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40→50만명)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103	10,466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보험료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	13,152	14,422	일자리 지원 80 → 84.5만개 확대
- 내일배움카드	10,150	12,369	K-Digital Training 확대(0.2조원)

2 문화 · 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0.9→1.2조원)

◇ (관광)스마트관광도시 6개 추가 조성, (문화)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의료)스마트병원 지방 확산 등 서비스산업 디지털化로 경쟁력 강화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0.4조원), 온라인 배송 인프라 등 전통시장 디지털化

○ (관광)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신규 3→6개소), **관광 빅데이터 구축** 확대(102→128억원)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2→총4개소) 등 **지역관광 수요 촉진** 및 영세관광업체 **신용보증융자 2배 확대**(500→1,000억원)

* 야간관광,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110억원)

- **여행사·MICE기업 디지털 전환**(25→54억원), **관광벤처발굴**(180→200개사), **미래관광인재교육센터** 신규구축(7억원) 등 관광산업 지원

○ (문화·예술)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창작·시연·창업** 등 종합지원을 위한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160억원)

-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1.5→2.1만명) 등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예술소비 창출 유도**

* 문학·시각·공연예술 창작지원(1,551→1,975건), 청춘마이크·실버마이크 등 우수 공연예술 작품 창작·발표기회 확대(청년 450팀→ 500팀, 실버 100팀 신설, 87억원) 등

- **한류확산, 핵심콘텐츠 육성** 중심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223억원 신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플랫폼 동반성장** 지원(15→446억원)

- **콘텐츠분야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험펀드** 및 **완성보증 공급** 등 정책금융 뒷받침(정부 출자·출연 1,431→2,074억원)

* 콘텐츠 분야 모험투자펀드 1,500 → 2,200억원 조성, 재기지원펀드 250억원 조성 및 보증공급 1,800→2,000억원 등

○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3개소** 추가(65억원), **모바일 건강관리 시범사업** 순차적 확산(89억원)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❶데이터중심병원** 지원(80억원) 및 **❷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착수(109억원)

* ❶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 표준화 및 DB 구축 지원(컨소시엄 7개×10억원 지원+우수 컨소시엄 2개×5억원 추가지원)
❷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암 진료·치료·예방 등 연구에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정보수집·보호·관리·연계·개방, 109억원)

- **모바일 기기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산(79→89억원)

* (21년) 2.4만명(160개소 × 150명) → (22년) 3.6만명(180개소 × 200명)

○ (지역상권)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6조원 규모**('20년 본예산 2배 수준)로 단계적 정상화

-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10% 할인발행 0.4조원**을 포함하여 총 3→3.5조원으로 발행규모 확대(+166억원)

- 34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배송 인프라*** **구축**을 지원(시장당 2억원, 국비 50%)하는 등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34억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을 위한 시장 內 공실 개조 등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 고
- 스마트관광 활성화	302	490	스마트관광도시 신규 3→6개소, 관광빅데이터 고도화(102→128억원) 등
- 지역관광 인프라	1,131	1,338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60억원),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등
- 예술창작지원	1,067	1,301	문학·시각·공연예술 등 창작 1,551→1,975건, 창작준비금 15→21천명
- 콘텐츠 정책금융	1,431	2,074	모험펀드 2,200·재기지원펀드 250억원 조성, 완성보증 2,200억원 공급
- OTT동반성장 패키지	15	446	특성화 대학 1개소 신규지원,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확대, 드라마펀드 300억원 출자
- 모바일 헬스케어 등	79	89	보건소 160개(2.4만명) → 180개(3.6만명)
- 지역사랑상품권	10,522	2,403	발행규모 6조원('20년 본예산 3조원의 2배수준)
- 온누리상품권	2,749	2,915	발행규모 3.5조원(3→3.5조원, +0.5조원)
- 디지털 전통시장	-	34	34개 시장에 온라인 주문·배송 인프라 구축

3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1.1→1.6조원)

◇ **벤처·스타트업 ❶스케일업·❷글로벌화 및 ❸청년·지역창업 활성화 투자를 약 0.5조원 확대하는 등 제2벤처붐 공고화(1.1→ 1.6조원)**

○ (스케일업) 유망분야인 **비대면** 스타트업(300개), **BIG3**(350개)·**그린뉴딜**(100개)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0.1→ 0.2조원)

- 잠재력이 높은 **아기유니콘 100개**를 선별하여 **최대 3억원**(자부담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벤처투자 강화**(0.6조원)

- (**스케일업 펀드**) **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 투자(1,000억원 출자→ 2,500억원 조성)
- (**창업초기 펀드**) **창업 3년** 이내 유망 벤처기업 투자(2,000억원 출자→ 3,400억원 조성)

○ (글로벌化)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뒷받침**을 위해 **❶자금**, **❷해외실증** 등 전방위적 **맞춤형** 지원(0.3조원)

- 200억원 **신규 재정출자**를 통해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 조성

- **120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함께 **20개 기술벤처 기업** 대상 **해외실증 자금 1억원** 등 신규 지원*(99억원)

* 사업화자금 1억원(자부담 30%), 해외 규제·인증·저작권 관련 자문, 해외실증 진행점검 등

○ (청년·지역)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非수도권 창업기반 조성**(0.5조원)

- 폐업 청년 전용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100명, 62억원)

* 청년 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6천만원(자부담 25%) 및 재창업 교육·멘토링 등 지원

- 非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기술혁신 대표 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스케일업 자금 3천만원** 신규 지원(28억원)

구분 (단위: 조원)	'21년		'22년안		증감	비 고
	소계(A)	국비	소계(B)	국비	(B-A)	
소 계	**1.1**	**0.5**	**1.6**	**0.7**	**+0.5**	**전년대비 +42.4% 증가**
❶ 스케일업	**0.6**	0.3	**0.8**	0.4	**+0.2**	사업화자금 580→ 850개로 확대
❷ 글로벌화	**0.2**	0.01	**0.3**	0.03	**+0.1**	글로벌펀드 200억원 신규 출자 20개 기술벤처 해외실증 신규 지원
❸ 청년·지역	**0.3**	0.2	**0.5**	0.3	**+0.2**	청년 100명 재도전패키지 신규 지원 지역대표 100개 기업 사업화자금 신규 지원

④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3.6→4.5조원)

◇ **K-반도체, 미래차 전환, 소부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8조원)**

◇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조성 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0.7조원)**

○ (전략산업) **K-반도체, 미래차 등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자금,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

-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기술개발(0.3조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인프라***(134억원) 등 K-반도체 전략 적극 뒷받침

  * 설계프로그램 등 공동활용 인프라(56억원), 설계도면 활용 및 수요연계 제품개발 지원(78억원)

- **미래차 산업 조기전환**을 위해 부품업계 **친환경차 투자자금** 신규 지원(0.2조원), **친환경차 내구성·자율주행 고도화**(0.2조원)

  *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R&D(57억원) 및 투자자금 이차보전(25억원)

- **조선업 시황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소 조선소 생산공정 자동화**(28억원, 신규) 및 **생산기술 인력 0.3만명 양성**(132억원)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121억원),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43억원)

○ (산업 스마트화) **스마트산단·공장 보급 및 확산**을 완성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全 **스마트그린산단**(10개소)* **물류·관제·에너지인프라** 고도화(0.14조원)

  * 창원, 반월시화, 구미, 인천남동, 광주, 대구, 여수, 명지녹산, 미포, 군산

- **'22년 0.5만개** 등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22년)를 달성하고, **스마트공장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 신규 구축(92억원)

  * 전기차부품업, 항공제조업, 반도체부품업

○ (소재부품장비) 對일본 100대 등 **핵심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및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선도품목*** 개발(2.2→2.3조원)

  * 반도체 등 5대 주력산업 관련 27개 품목 및 바이오·그린 등 4대 신산업 38개 품목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지원 및 **글로벌 대표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40→60개) 등 **튼튼한 산업 기반**도 확보(0.3조원)

○ (수출경쟁력) 코로나19 이후 **수출 비대면化**를 위해 마케팅·글로벌플랫폼 입점 등 **전자상거래 지원확대**(5,807개社, 367억원)

- 계약·수출신고 등 수출全과정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55억원)
- **新한류**와 연계한 **수출상품 인지도 제고***(95억원), 그린·K-방역 등 **新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통한 수출 상승세 유지(185억원)

*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50억원, 신규)·해외홍보관 운영(45억원, 신규)

○ (K-글로벌 백신허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22년 0.7조원**(R&D 0.3조원), **'26년까지 2.2조원**(R&D 1.2조원) 집중 투자

- 민관역량 총동원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22~'23)' **신규 조성**

총 조성규모	국고(10%)	공공기관(30%)	국부펀드(30%)	민간(30%)
1조원	0.1조원	0.3조원	0.3조원	0.3조원

- 국산백신 1,500만회분 **선급금 지원**('21.추경 720억원)에 이어 **'22년 예상잔금 소요 1,000만 회분 반영**(1,920억원)
- **원부자재·생산공정 등 R&D** 지원(68억원) 및 융합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학위~전문의 과정별 지원(979명, 143→23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전략산업**	**5,962**	**9,191**	
- K-반도체 기술개발	1,439	2,896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1,455억원), K-Sensor 기술개발(153억원) 등
- 친환경차 부품전환 기업 금융지원	-	25	친환경부품 전환기업 이차보전(1.0~2.0%p), 1,660억원 금융공급(신규)
- 중소 조선소 생산혁신	-	28	중소조선소 자동화장비 및 기술지원(20개소)
○ **산업 스마트화**	**5,613**	**5,637**	
- 스마트그린산단	1,236	1,401	스마트통합관제·물류·에너지플랫폼 구축(10개소)
○ **소재부품장비**	**21,545**	**22,665**	
- 소부장 특화단지	-	399	5개 특화단지 R&D 149억원, 기반구축 250억원
- 소부장 으뜸기업	300	865	으뜸기업수 40개→60개 확대
- 미래선도품목	-	191	미래선도품목(65개) R&D지원
○ **수출경쟁력**	**852**	**1,202**	
- 수출 비대면화	382	422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367억원),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지원 플랫폼(55억원)
○ **K-글로벌 백신허브**	**2,023**	**6,649**	
- K-글로벌 백신펀드	-	500	총 1조원 규모 백신펀드 조성
- 의사과학자 육성	143	237	K-medi 융합형인재(24억원), 보건의료인재(37.5억원), 융합형의사과학자(90.1억원) 등(420→ 979명)

5 SOC 고도화 · 첨단화 (2.7→3.4조원)

◇ GTX A·B·C 본격 추진(0.3→ 0.6조원) 및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
◇ SOC 핵심안전기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1.4→ 1.5조원)

○ (국가교통망 확충) **GTX-A 적기 완공**을 위한 공사비 반영 및 **GTX-B · C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본격화(0.3→0.6조원)

* (GTX-A) 1,233→3,309억원(공사비), (삼성~동탄) 988→1,300억원(공사비)
(GTX-B) 30→803억원(민자 설계 및 협상비 등), (GTX-C) 425→1,030억원(보상비)

-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광역도로 · 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867→1,276억원)

* 광역도로 : 다사~왜관, 조야~동명 등
광역철도 : 대구권(구미~동대구~경산),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대전~옥천

-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11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 개시**

* 지방 광역철도 신규사업 : (3차계획) 1개(0.5조원) → (4차계획) 11개(12.1조원)

- **선로용량 적기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0.3→0.5조원)

○ (SOC 첨단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22년 완공** 등 미래 모빌리티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440→747억원)

-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적용분야 확대를 위한 **新사업 모델 발굴** 지원 확대

* 인프라 : 무인기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 등 '22년 완공
실증·상용화 : 드론 규제샌드박스 10→12개사, 드론 실증도시 7→8개소

-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 외산·노후 철도신호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개량(113억원, 신규)
** 철도 전기설비 IoT('22년 1만개), 터널 IoT('22년 27개소) 구축 등

○ (스마트시티) **세계선도형 K-City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 **구축 및 성과 확산**

- 국가시범도시 내 **AI 데이터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291억원)

-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 등 **대-중소 도시 실증·확산** 투자 강화(834→1,176억원)

* (예) 스마트횡단보도(바닥신호·정지선위반 안내 등), 스마트 버스쉼터(냉·난방, 스크린도어 등) 등
* 기업·대학·시민주도 혁신기술 발굴(15건, 200억원), 대/중소도시 실증·보급(20건, 560억원) 등

○ (스마트물류)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공급(천안, 총 367억원)하고,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166억원)

- 첨단 물류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이차보전**(최대 2%p) **지원**

* 인증제도 운영 5억원, 이차보전 161억원(인증 등급에 따라 0.5~2%p 지원)

- 신규 도시의 디지털 물류체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 실증**으로 **기존 도시**의 **물류문제 개선**(4~5개소, 40 → 50억원) 추진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GTA A~C(4개)	2,676	6,442	【GTX-A+삼성-동탄】 공사 【B】 설계 【C】 보상
- 지역 광역철도(4개)	511	1,014	충청권 1단계, 대전~옥천, 대구권, 안심~하양
- 고속철도(5개)	3,469	5,156	【호남고속 2단계】 공사, 【평택~오송 2복선화】 설계
- 도심항공교통 실증	118	246	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인프라 구축 등
- 드론실증인프라	322	501	규제샌드박스 10→12개소, 실증도시 7→8개소
- 디지털 철도신호시스템	-	113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 구축 설계비
- 디지털 국토정보기술개발	-	107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가공 기술 개발 등
- 스마트시티챌린지	834	1,176	혁신기술 발굴(15건, 200억원), 스마트시티 조성(신규 20건, 계속 9건 / 960억원)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27	58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2개소 신규 구축
- 스마트물류	226	256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40→50억원)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108→166억원)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2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1년	'22년
소득·고용 안전망	상병수당 시범사업	-	263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	8만명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人)	146.3만원/월	153.6만원/월
5대 부문 격차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5~8구간)	67.5~368만원	350~39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15.2만명, 20만원/월
	디지털 돌봄	8.4만명	12.7만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00시간	월 120시간
	3대 문화 바우처	194만명	245만명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4.5만개	7만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양육비 (근로소득공제)	월 10만원 (-)	월 20만원 (30%공제 신설)
농어민	농지연금	65세이상	60세이상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255개소	345개소
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지원	-	25만원/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추경 1조원)	1.8조원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최대 1억원
	온라인 판로진출	5.3만개	6만개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0.7조원	1.2조원
	접경지·섬 LPG 지원	951세대	1,490세대
	생활 SOC(목표달성률)	72.7%	108.8%

1 소득 · 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16.6→18.8조원)

◇ **기준중위소득 5.02%(4人) 인상. '15년 개별급여 전환 후 최고 수준**

◇ **플랫폼 종사자 20.1만명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해 263만명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소득 】 15.3→16.9조원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15.0→16.4조원)

*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가구 78.5%)는 가중치 상향으로 6.4% 큰 폭 인상

** 기준중위소득 추이: ('16) 4.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월 146.3→153.6만원**(4人)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로 지원대상 **+5.3만 가구 추가** 지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2.1월~)로 **+11만명 추가** 지원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46%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교육활동지원비 21.1% 인상**(초 28.6→33.1, 중 37.6→46.6, 고 44.8→55.4만원)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1년	'22년	증가율	비고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	5,121,080	+5.02%	
(1인 가구)		(1,827,831)	(1,944,812)	(+6.40%)	
4인 가구	생계급여(기준중위30%)	1,462,887	1,536,234	+5.02%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기준중위40%)	1,950,516	2,048,432	+5.02%	
	주거급여(기준중위46%)	2,194,331	2,355,697	+7.35%	기준임대료 4인(1급지): 48→50.6만원/월
	교육급여(기준중위50%)	2,438,145	2,560,540	+5.02%	고교생 교육활동지원비: 44.8→55.4만원

○ (위기가구) **빈곤층 추락 방지**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긴급복지 요건 완화**

-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263만명, 110억원)

* 전국민의 5%인 263만명 대상 최저임금의 60% 지원(6개 지역 + 3개 사업장)

-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신규, 265억원)

- **산재보험**은 SW인력,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 대상 신규 적용,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 사유 축소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0.1조원)

- 위기가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요건 완화**

* 일반재산: 대도시 1.88→2.41억원, 농어촌 1.01→1.3억원, 금융재산: 5→6백만원

【 고용 】 [1.3→1.9조원]

○ (전국민 고용보험) '22년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 구직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20.1만명)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42.9만명), **가사근로자**(0.3만명)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1,370억원)

-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8만명, 0.2조원),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 확대**(0.4→0.5만명, +225억원) 등 실업시 **생계안정 지원**

○ (고용안정)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명**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0.4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기초생보(7대급여)**	**15.0조원**	**16.4조원**	
- 생계급여	46,079	52,648	최대급여액(4인) 5.02% 인상
- 의료급여	76,805	81,23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1만명
- 주거급여	19,879	21,819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 45→46%)
- 교육급여	1,030	1,222	교육활동지원비 21.1% 인상
○ **위기가구**	**0.2조원**	**0.4조원**	
- 상병수당 시범사업	-	110	6개지역, 3개 사업장 263만명(전국민 5%) 대상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265	22만명 대상 연금보험료 50% 지원
- 산재보험급여(특고 종사자, 학생연구자 특례)	279	1,020	SW 프리랜서·대학원 연구생 신규 지원
- 긴급복지	1,856	2,156	일반・금융재산 요건 완화
○ **고용안전망**	**1.3조원**	**1.9조원**	
-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	2,076	약 8만명 대상 구직급여 신규 지원
- 보험료지원(특고, 임시, 가사)보험료 지원	-	1,370	플랫폼 종사자 20.1만명, 임시・일용직 42.9만명, 가사근로자 0.3만명 대상

2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36.9→41.3조원)

◇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총 36.9→ 41.3조원 투자

교육(4.2조원)	주거(33.6조원)	의료(0.4조원)	돌봄(2.8조원)	문화(0.2조원)
학습특별바우처	공적임대주택	재난적의료비	아동·노인·장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주거비부담	정신건강	맞춤형 돌봄	장애인예술

【 교육 】 3.5→4.2조원

○ (초·중·고) **학습특별바우처 신규 지급**(年 10만원, 101억원)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512→600명) 등 **저소득층 학습지원 확대**

-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500만원) 및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신설**(28억원, 신규) 등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대학생)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 셋째이상**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단가 인상**(+0.7조원)

* 기초·차상위(520 → 700만원/둘째 이상 전액, 17.5만명) 5~8구간(368~67.5 → 390~350만원, 56.2만명), 기준중위 200% 이하 다자녀가구(520→셋째이상 전액, 14만명)

○ (평생교육)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지급**(1.5→3만명) 및 **온국민 평생 배움터** 구축(35억원, 신규)

【 주거 】 30.4→33.6조원

○ (공적임대) **21만호를 신규 공급**('18~'22년 **총 100만호** 수준)하고 **품질 제고**를 위해 **단가상향**(건설형 +5%), **중형평형 확대**(1→6.2천호)

○ (청년주거 지원) **독립거주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20만원**(12개월)*의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원)**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 제외한 차액 지급

** 총 3,003억원 / 국비 1,369억원(서울 30%, 지방 50%), '22예산 821억원(1년차 60% 반영)
지원대상: 청년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 전체가구(부모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월 20만원) **신규 도입** 및 中企 **취업청년 저리**(1.2%) **보증금대출 연장**(~'23년) 등 병행(0.25조원)

○ (도심지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시 기반시설**(주차장 등) 지원, **주거특화형 도시재생** 등 신규 도입(각 30곳, 신규 0.1조원)

○ (공공자가주택) 적은 초기부담으로 주택취득이 가능하도록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시범도입**(450호, 90억원)

【 의료 】 0.3→0.4조원

○ (격차해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50→최대 80%로 확대,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개소)

- 건강보험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최대 80% 비율***로, 年 3,000만원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288→437억원)

* [현행]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
[개선] 기초·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 50% 이하는 70%, 기준중위 100% 이하는 60%, 기준중위 200% 이하는 50%로 지원비율 차등화

○ (정신건강)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대응 **투자 확대**(0.2조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확대로 감염병 트라우마 상담·치료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 적극 지원**(919→1,086억원)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확충(57→80명),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 내실화**

【 돌봄 】 2.5→2.8조원

○ (아동) **시간대별 돌봄 미스매칭 해소** 및 **취약계층 돌봄 부담 완화**

- 출·퇴근 시간대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30개소, 신규)

- 저소득(중위 75% 이하) **청소년·조손가족**의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5%p)으로 국가에서 **최대 90%**까지 돌봄 비용 지원

○ (노인) **디지털 돌봄**(8.4→12.7만명) 및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20→30만명) 등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장애, 최중증장애인** 등 공백 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2.4→2.7조원)

-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확대(6.5→6.9만명), **중위 120% 초과 중증 장애아 돌봄 신설**(+1천명),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시간 확대*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월 100 → 120시간

○ (기반)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9개 시설, 55천명) **보수**를 **평균 +3.4%**(공통 1.4% + 추가 2.0%) 인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1) 8,701 → ('22) 8,999억원(+3.4%, +289억원)

- 특히,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을 중심으로 **가장 열악한 14개 시설 종사자 보수**는 **최대 +9.4%** 인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7.3% → 91.3%(+4.0%p) 상향, (여가부) 84.0% → 88.7%(+4.7%p), (복지부) 90.6% → 94.0%(+3.4%p)

【 문화 】 0.16→0.2조원

○ (3대 바우처)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지원대상**을 194→**245만명**으로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차상위의 80%(177→210만명) 대상 연 10만원 문화활동비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단가·기간 확대(7.2만명/8만원/8개월→7.8만명/8.5만원/10개월)
- (**청소년 북토큰**) **교육복지 우선대상 전원**으로 확대(10→27.6만명/연12천원)

○ (장애인) 장애(예술)인 창작·향유를 위한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2.4월)

* 장애예술공연장 운영 37억원(신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198→240건) 등 확대(86→131억원)

< 국민생활 5대부문 격차완화 >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교육**	**3.5조원**	**4.2조원**	
- 학습특별지원(바우처)	-	101	저소득층 초중고생(31만명)
- 국가장학금 지원	34,853	41,348	기초・차상위 700만원(둘째 이상 전액), 5~8구간 390 ~ 350만원 등
○ **주거**	**30.4조원**	**33.6조원**	
- 공적임대주택	196,667	228,666	21만호 신규공급, 단가상향(건설형 +5% 등)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821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지원(15.2만명)
- 도시재생(소규모주택정비, 주거재생특화)	-	963	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지원 30곳 주거재생특화 도시재생뉴딜 30곳
- 청년특화대출	1,876	2,481	중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10.1만명)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15.5만명)
○ **의료**	**0.3조원**	**0.4조원**	
- 재난적 의료비	288	437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차등화(50→최대 80%)
- 지역책임의료기관	65	103	35→43개소
○ **돌봄**	**2.5조원**	**2.8조원**	
- 다함께돌봄사업	413	526	다함께돌봄센터 923 → 1,373개소, 학교돌봄터 100 → 200실
- 디지털 돌봄	190	255	시범사업('20~'22) 8.4 → 12.7만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12	251	20→30만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	1,492	발달재활 6.5→6.9만명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	913	1,357	대상 0.9→1만명, 月 100→120시간
○ **문화**	**0.16조원**	**0.2조원**	
- 통합문화이용권	1,261	1,499	수혜율 75%(177만명)→80%(210만명)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332	476	72→78천명, 8→8.5만원/월, 8→10개월
- 청소년 북토큰	12	33	10 → 27.6만명

3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21.6→23.3조원)

◇ 노인·장애인 일자리 87만명 지원, 한부모 자녀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저소득·고령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신설,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 소외계층 】 18.0→19.4조원

○ (노인) **노인일자리 확대**(80→84.5만개), **기초연금** 지원(598→628만명) 등 노인빈곤 완화

- 노인일자리 질 제고 위해 사회서비스형을 확대(4.5→7만개), 다양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 신설

  * 민간 등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 대해 월 10만원 인센티브 지원

○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부터 **편의·문화 지원** 등 **생활 전반**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장애인 연금**(30→30.15만원), **직접 일자리** 확대(2.5→2.7만개) 및 **소득-고용연계 시범사업***(21억원, 신규) 지원

  * 소득활동종합조사(가칭)를 통해 근로능력이 낮은 400명 대상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지원**** 확대로 **일자리 연계**

  * IT 맞춤훈련센터 확충(2→3개소), 발달장애인특화 직업훈련과정 확대(6→19개소)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3천명, 30~80만원), 진로설계 컨설팅 확대(5→7천명) 중증장애인 취업연계 현장훈련 확대(5→6천명), 장애인취성패 저소득층 확대(2→3천명)

○ (한부모)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시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돌봄, 교육, 직업) 신설(1천명)

-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월 10→2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안정 도모**

○ (다문화) **자녀 대상** '취학前-취학後-전연령' 학습지도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37억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18억원)

【 보훈 】 3.3→3.5조원

○ (보상금)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보상금을 5.0% 인상**(1급1항 316.5 → 332.3만원, 3.1→3.2조원)

○ (생계지원금) 고령·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月 10만원 신규 지급**(월 10만원, 5,728명, 69억원(신규))

○ (위탁병원 약제비) 의료가 필요한 **유공자 등 본인의 진료편의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 지원**(연 25만원 한도, 11만명, 69억원(신규))

○ (교통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카드의 전국호환 시스템** 구축('22년 완료, 68억원)

【 교통 · 디지털 접근성 】 0.2→0.3조원

○ (교통약자)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2,030→ 3,264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강화**(727→1,091억원)

○ (디지털접근성) 고령층 등 **디지털 활용 제고**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공공 Wi-Fi 4.1만개** 구축('20~'22년) 완료(1,698억원)

- (**교육**)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8개소 지원(798억원)
- (**인프라**) '22년 공공Wi-Fi 1.6만개, 농어촌 인터넷망 482개 마을 추가 구축(61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노인일자리	13,152	14,422	80→84.5만개(사회서비스형 4.5→7만개)
- 기초연금	149,635	161,140	30→30.15만원, 598→628만명
- 장애인일자리	1,596	1,832	2.5→2.7만명
- 장애인신규고용 장려금	-	79	의무고용 없는 소규모사업장 장애인 고용시 30~80만원(3년한시)
- 보훈보상금	30,593	31,975	기본보상금 5% 인상
- 한부모 가족 지원	3,067	4,213	근로소득공제(30%)도입,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확대(월 10→20만원)
- 디지털 접근성	1,669	1,698	디지털 배움터 1천곳 운영 등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4.5→5.0조원)]

□ (돌봄) 공백없는 지원으로 장애인가족 돌봄부담 완화 (2.4→2.7조원)

○ (장애아동)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인원 확대(6.5→6.9만명), **중증장애아 돌보미** 시간확대,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318억)

* 18세 미만 장애아(6세미만 의심아동 포함) 대상 전문의사 및 상담사 재활치료
** 지원시간 : 年 720 → 年 840시간, 중위 120% 초과 장애아 가족까지 신규 지원

○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내실화**(월 100 → 120시간)로 지역사회 참여 지원

*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참여 바우처 제공

○ (최중증)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확대해 **최중증 장애인 돌봄기피** 방지

*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3→4천명), 인센티브 인상(시간당 +1,500원 → +2,000원)

□ (소득·고용)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1.7→1.9조원)

○ (근로능력低) **장애인 연금**(30→30.15만원), **직접일자리** 확대(2.5→2.7만개)

- **고용연계 시범사업**(21억원, 신규)으로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재활** 확대

○ (근로능력有)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연계**

* **IT 맞춤훈련센터** 확충(2→3개소), **발달장애인특화 직업훈련과정** 확대(6→19개소)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3천명, 30~80만원), **진로설계 컨설팅** 확대(5→7천명)
중증장애인 **취업연계 현장훈련** 확대(5→6천명), **장애인취성패** 저소득층 확대(2→3천명) 등

□ (편의) 일상 속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0.1→0.2조원)

○ (건강)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운동** 확대(180→220개소), 수화통역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8→12개소)

○ (이동)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2,030→3,264대), Barrier Free 인증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강화(+364억)

○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신규, 200명)을 통해 선도모델 개발

□ (문화) 문화 향유권 향상 및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0.11→0.12조원)

○ (문화)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지원** 확대(+15억), 장애인 창작·향유 거점공간인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2.4월) 지원(+38억)

○ (체육) 장애인 이용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2.5억), 장애인 **VR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10억) 등 생활체육 참여 제고

4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 (5.7→6.3조원)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여성·외국국적 농어업인 건강보장(0.2조원)
◇ 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강화(1.1조원)
◇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지역 정주여건 개선(0.5조원)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농어업 디지털化 지원(0.1조원)

【 농어민 상생회복 】 4.4 → 4.9조원

○ (농어가 소득안정)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이상) 및 **연금지급 확대**(+297억원) 등 **고령농 생계안정 지원**

-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1.1만명, 24억원), 외국국적 대상 **건강보험료**(2.9만세대, 113억원) **신규 지원**

- 농·어가 **공익직불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 지원(2.4조원)

* 농업부문은 `20년, 수산부문은 `21년 공익직불제도 도입·개편

○ (재해예방·피해지원) 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사전적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1.0→1.1조원),

- 재해대책비, 농업·양식어업 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0.8→1.1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❶ 농어가 소득안정	25,933	26,411	
- 농지연금(융자)	1,809	2,106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 여성농어업인특화건강검진	-	24	`22년 신규, 농업인(9천), 어업인(1.5천명)
- 외국국적 농어업인 건보료 지원	-	113	`22년 신규, 농업인(2.3만), 어업인(0.6만 세대)
- 공익기능증진직불	23,610	23,610	`20년 신규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지원
❷ 재해예방·피해지원	18,330	22,362	
- 배수개선	3,245	3,751	신규지구 51 → 60개소로 확대
- 농업재해보험	4,755	6,85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전망(51→58%)

【 농어촌 활력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 1.3 → 1.4조원

○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300** 등 **345개***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5,250 → 5,586억원)

* 345개소: (농촌) 5 → 45개소, (어촌) 250 → 300개소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RE100 실증사업**(4개소)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비용(5개소) 등 **신규 지원**(28억원)

○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1,800→ 2,000명) 및 **어촌정착지원금**(200→220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351 → 406억원)

- 청년 농업인 등 **농지임대**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투자 확대 등 **농어촌 청년 유입** 지원 강화(6,944→7,323억원)

○ (농어업 디지털化) **임대형 스마트팜**을 **6→12개소**로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모델** 등 투자 확대(333→732억원)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생산유통시설**(APC), **비대면 수출 활성화** 등 **ICT 기반 유통체계** 구축 지원(71→40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❶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5,250**	**5,586**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31	322	5 → 45개소, 신규 40개소
- 어촌뉴딜 300	5,219	5,177	250 → 300개소, 신규 50개소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18	신규 4개 마을 실증지원
❷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7,295**	**7,729**	
-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	351	406	지원대상 2,000 → 2,220명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6,944	7,323	농지임대 지원단가 248 → 388백만원/ha
❸ 농어업 디지털化	**404**	**1,136**	
-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126	330	2 → 6개소, 신규 4개소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	62	데이터 모델 23종 신규보급

5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 (1.1→3.9조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하고, **'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3배 이상 확대** (1.1→ 3.9조원)

위기극복(3.3조원)	폐업·재기(0.1조원)	창업(0.02조원)	성장(0.5조원)
•손실보상(신규)	•원스톱 폐업지원	•新사업 창업지원 확대	•온라인 판로진출
•경영개선자금(신규)	•특화 취업교육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신규)	•디지털·스마트化
•희망대출(신규)	•재창업자금 확대	•강한 소상공인 육성(신규)	•스마트 설비 자금

【 코로나 위기극복 】 0.6→3.3조원

○ (위기극복)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 뒷받침(1.8조원)

* '21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旣반영** → **추가 소요 발생분**은 '22년 예산으로 반영

○ (긴급지원)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체**에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 및 **컨설팅** 등 신규지원(238억원)

-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그램 >

구분	대상	규모	지원내용
❶경영위기 업체	**0.3만명**	**238억원**	교육·컨설팅(3천명),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1천명)
❷저신용 등	**9.14만명**	**1.4조원**	
희망대출	7만명	7,000억원	저신용 금지·제한업종, 1.9%, 최대 1천만원
재도전자금	0.14만명	1,400억원	저신용 중 유망아이템 보유, 4%, 최대 1억원
청년고용유지	2만명	6,000억원	청년고용 1년 유지시 △0.2%(2→1.8%), 최대 3천만원

【 단계별 맞춤형 지원 】 0.5→ 0.6조원

○ (폐업·재기) **폐업컨설팅** 신청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 **원스톱 패키지** 지원(1만명, 400억원)

-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前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강화, 재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화자금 2배**(1→2천만원) 확대(1.6만명, 502억원)

○ (창업)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新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 **준비된 창업자**에게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천만원** 지원(123억원)

-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가능성 검증 및 실험비용 1천만원** 신규지원(15억원)

-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가능한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 신규지원(29억원)

*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발굴·육성

○ (성장)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 **7천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化** 지원(0.2조원)

-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0.3조원)

-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로 육성(1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ㅇ 폐업·재기	**671**	**902**	
- 원스톱 폐업지원	227	400	전문 법률상담 추가하고 원스톱 서비스化(1만명)
- 취업·재취업	444	502	특화교육(1만명) + 재창업패키지(0.6만명)
ㅇ 창업	**115**	**167**	
- 준비된 창업자	115	123	교육·실습(500명) → 사업화자금 2천만원(400명)
- 청년 도전자	-	15	청년 대상 교육·사업화자금 1천만원(100명)
- 강한 소상공인	-	29	100개팀 선발 → 10개팀 대상 최대 1억원 지원
ㅇ 성장	**4,176**	**4,680**	
- 온라인 판로지원	726	875	라이브커머스·모바일 홈쇼핑 등 입점지원(6만명)
- 스마트상점·공방	444	790	스마트기술 도입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지원(0.7만개 업체)
- 스마트자금	3,000	3,000	스마트설비 도입 2%대 금리, 최대 5억원(0.1만명)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6	15	BM모델 개선, 경영컨설팅, 브랜딩 등(30개 업체)

6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24.9→52.6조원)

◇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신설, 10년간 매년 1조원 정액 지원

◇ 초광역시범협력 등 지역균형뉴딜 가속화(10.8→13.1조원)

【 재정분권 · 재정보강 】 +24.7조원 순증

○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신설*(年1조원), 지방소비세 순증(1조원 수준) 등 지방재원 2조원 규모 순확충(2단계 재정분권)

* (지자체) 거점지역 선정·투자 (중앙부처) 투자계획 자문, 재정·금융·규제 패키지 지원

○ 지방교부세(+11.6조원), 교육교부금(+11.1조원) 등 자주재원 대폭 확충

【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 11.7→12.1조원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프로젝트 본격 추진(0.7→1.2조원)

[18개 SOC 사업 가속화: 0.4 → 0.8조원]		
구분	공사 · 착공(7개)	설계 실시(11개)
수도권 · 강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옥정~포천선, 제2경춘국도
충청권	평택~오송 2복선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충북선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호남 · 제주	서남해안 관광도로	새만금공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동남권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대구 · 경북	동해선 단선전철화	대구산업선
전국	국도 위험구간(전국 8개 구간)	
[5개 특화·전략산업 본격 육성: 0.3 → 0.4조원]		
전략산업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지역R&D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지역특화산업육성+	

○ (생활SOC) '22년 10.8조원 규모 지역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등 생활SOC 3개년 계획 초과달성('20~'22년 32.6조원, 목표대비 +2.6조원)

- 횡단보도조명설치 등 도로환경개선(9,174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2,011억원) 등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구축(5.9조원)
-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380억원), 문화센터(715억원), 작은 도서관(95억원) 조성 등 국민여가활력 기반 구축(4.1조원)
- 국공립어린이집(609억원), 지방 의료원시설현대화(490억원) 등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조성(0.8조원)

※ 메가시티 본격 추진 지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22.1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 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 지원**(223억원)

<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억원) >

초광역권	분야	총사업비	'22 국비
< 합 계 >		**1,322**	**223**
부산·울산·경남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R&D)	439	40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R&D)	100	18
	동남권 그린수소항만 빅데이터플랫폼	14	8
대전·세종·충남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276	20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R&D)	100	18
충북·강원·제주	바이오 진단 치료 의료기기(R&D)	100	18
전북·전남·광주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40	24
경북·강원	환동해 해양헬스케어벨트조성	31	19
전북·대구·경북	전기차·자율차 부품·제조(R&D)	100	18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 전력시스템(R&D)	100	18
기반구축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12	12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전략수립	10	10

○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12개 사업, 867→1,276억원)

【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 10.8→13.1조원

○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3+1 분야**(지역공간·산업·환경+초광역시범) **우선 지원**(10.8→13.1조원)

(단위: 조원, %)

구분	총규모(~'25)	'21년	'22년	증가율
뉴딜 2.0	**62.2**	**10.8**	**13.1**	**21.1**
• 지역공간	34.5	5.5	7.4	34.1
• 지역산업	22.7	4.4	4.6	4.8
• 지역환경	5.0	0.9	1.1	19.6
• 초광역시범협력	1,322억원	-	223억원	신규

- (**지역공간**)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등
- (**지역산업**)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840억) 등
- (**지역환경**)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
- (**초광역 시범협력**)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R&D(5개)

【 지방소멸대응 】 2.4→2.7조원

○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 → 정착** 촉진을 위해 **일자리, 교육, 생활인프라** 확충 강화(2.4→2.6조원)

- (**유입**)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확충**(**2.6만명**), 먹거리 마중물 지원 등
- (**정착**) **청년자립형 마을**(年12개소), 지역평생교육 및 귀농·귀어민 컨설팅 등
- (**생활여건**) **접경권·섬지역 LPG 인프라**,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2.0 추진**(10대 브랜드* 사업, 771억원)

  * 공유오피스(19억), 혁신융합캠퍼스(25억), 수요응답형 셔틀(11억) 등 신규 및 계속사업

-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 확대**(49→159회) 등 **지역문화향유 기반 확충**

-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협업 혁신 인재양성 사업**(RIS) **확대**(4→5개 권역, 2,040억원)

- **지역전문대**를 **고등 직업교육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역할 강화 지원**(250→40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 고
❶ 재정분권·재정보강	**-**	**24.7조원**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	7,500	연간 1조원(초년도는 집행시기 고려, 0.75조원)
- 지방 자주재원		+226,835	교육교부금(+110,708), 지방교부세(+116,127) 증분
❷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11.7조원**	**12.1조원**	
- 동해선 단선전철화	1,124	2,618	'22년 공사
-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234	380	신규 40개소, 계속 73개소 구축
❸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10.8조원**	**13.1조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645	709	'22년 본격 착공(광주)
-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	236	840	폐배터리(경북, '22착공), 플라스틱(부산 '22착공), 생물소재(인천 '23완공), 청정대기(광주, '23완공), 수열(춘천 '22계획)
- 지역협력혁신성장(R&D)	-	90	조선해양(부울경), 헬스케어(대전세종충남), 의료기기(충북강원제주), 전기자율차(전북대구경북), 전력(광주전남)
❹ 지방소멸대응	**2.4조원**	**2.7조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50	2,396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2.6만개 창출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D)	1,710	2,040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4→5개) *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 '22공모
- 혁신도시 2.0	-	771	공유오피스(19억원), 혁신융합캠퍼스(25억원), 수요응답셔틀(11억원) 등 10대 브랜드 사업
- 접경·섬 지역 LPG 인프라	-	122	접경지 875세대, 섬 615세대 LPG 인프라 구축 * '21년 별도 시범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으로 951세대 지원

[청년 대책 (20.2→23.5조원)]

□ (일자리) 청년들의 구직·역량향상·채용기회 확대 (4.0→5.5조원)

○ (고용창출) 취업취약계층 청년대상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14만),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개편·재추진(2.6만명)

*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年 최대 960만원 지원

○ (구직·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확대*, 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 청년친화형 기업ESG 신규지원**

* Ⅰ유형 청년 '21년 10만명 → '22년 17만명

** 기업 자율적으로 일경험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친화적 ESG프로그램을 신설확대 시 비용지원

○ (신산업 직업훈련) K-Digital Training(1.7→2.9만)·K-Digital Credit(4→7만) 등 인재양성, 대학인프라 활용 교육훈련 및 SW기업 채용연계 확대*

* SW기업의 대학 인프라 활용 교육훈련 및 채용연계 지원(550명, 78억원)

○ (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1,600→2,100억),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폐업청년 재도전 지원 신설(62억원)

□ (자산형성)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 지원 확대 (1.7→1.9조원)

○ (소득맞춤형 지원)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가입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 + 정부 360~1,080)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p수준 (1년 2%→ 2년 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 ~ 5년)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도 충족 필요 / ** 매칭비율: (차상위 이하) 1:3, (차상위~중위 100% 이하) 1:1

○ (내일채움공제) '21년말 종료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22년 한시 연장(2만명), 신규채용자 7만명 추가 지원

○ (장병 자산형성) **장병내일준비적금**(최대 750만원)에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 **사회복귀시 최대 1,000만원 수령**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40만원 납입) **가산금리**도 **신규 지원**(1%p)

□ [주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취득 기회 확대 (5.9→6.3조원)

○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月 20만원, 12개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月 20만원) **신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연장**(~'23)

* (대상자) 만 19세~34세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금리/한도) 1.2% / 최대 1억원

○ (주택취득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일몰연장**(~'23)**·소득요건 완화**(3→3.6천), 청년층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 시범 공급**

□ [교육·복지·문화] 청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기본권 보장 (8.5→9.7조원)

○ (교육)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및 5~8구간 단가 인상**('21년 67.5~520만 →'22년 350~700만원)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 달성**(+0.7조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2.9만명) 및 **상환부담 완화**(0.2만명),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도 **확대**(+140억원)

○ (복지)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청년들에 대한 **심리건강 보호 지원, 장병복지·자기개발 지원 확대**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57억) 및 **청년층 대상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291억원)

▪ **병봉급 인상***(11.1%) 및 **급식단가 인상****(25.1%),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153억)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원)

* ('21) 60.9 → ('22) 67.6만원 / ** ('21) 8,790원 → ('22년) 11,000원

○ (문화) **저소득청년 대상 문화활동비 지원**(220억)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5→2.1만명)

3 디지털 ·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2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1년	'22년
탄소중립 경제 선도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	-	3개소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26.4만대	50.0만대
	내연차·석탄발전 등 종사자 노동전환 지원	-	15만명
	도시 숲 조성(누적)	425개소	791개소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광역)	-	17개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190종	360종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425개	2,088개
	스마트빌리지 확대	6개소	10개소
미래산업 전략 R&D	친환경차 기술개발 과제	84개	141개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과제	12개	110개
	운용 인공위성 개수	8기	11기
	개인기초 우수연구 과제	8,764개	9,475개
혁신인재 양성	캠퍼스 SW 아카데미	-	550명
	반도체 설계 등 전문인력양성	625명	852명
	미래우주교육센터	-	5개소
	의사과학자	420명	979명

1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7.3→11.9조원)

◇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 과감한 재정투입,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저탄소 생태계(0.8조원)	공정한 전환(0.5조원)	제도적 기반(2.3조원)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유망·혁신기업 육성	취약산업·계층 지원	녹색금융·R&D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지원	제도기반·국제협력

기후대응기금 신설(2.5조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22년 시범)

【 경제구조 저탄소화 】 (5.0→8.3조원)

○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 산업구조 · 모빌리티 · 국토 4대 부문 대전환 추진**

❶ **(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0.7조원), 축사·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보급**(0.3조원) 확대

- (**에너지효율**) 가정용 **스마트전력계량기 500만호**(누적) **보급 완료**(282→2,267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 융복합 설치지원**(114→200개소, 1,577→1,758억원)
  지자체 지원(50→80개 지자체, 100→110억원)
- (**수소에너지**)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 지원(50억원, 신규)

❷ **(산업구조)**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多배출 산업 공정 대체기술개발**(190억원, 신규) 및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

- **중소기업** 저탄소化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55억원, 신규)

- (**공정대체**)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74억원, 신규)
- (**감축설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감축설비 지원**(222→879억원)
- (**연료전환**) 산단 열 공급업체 **연료전환 설비**(유연탄→바이오매스) 지원(100억원, 신규)

❸ **(모빌리티)**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21) +11.6만대→ ('22) **+23.6만대**로 **2배 이상 보급 확대**(1.6→2.8조원)

구 분	'21년	'22년	(전년대비)	'25년
전기차(누적)	**23.9만대**	**44.6만대**	(+20.8만)	**113만대**
수소차(누적)	**2.6만대**	**5.4만대**	(+2.8만)	**20만대**
전기차 충전기(누적)	**9.9만기**	**13.7만기**	(+3.8만)	**51.2만기**
수소차 충전소(누적)	**180기**	**310기**	(+130)	**450기**

❹ **(국토·생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도 **확충**

- **도시 열섬완화**에도 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 대폭 확대**(2,338→2,688억원)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연장**(2,276→2,245억원)
- (**흡수원**)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육상 탄소 흡수원 확충**(신규, 35억원)
- (**지역**)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526→1,177억원)

【 신유망 · 저탄소 생태계 】 (0.6→0.8조원)

○ (신유망산업)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 확보**

- (**무공해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3세대 자동차 기술개발**(474→591억원)
- (**신기술**)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실증 및 상용화(신규, 66억원)
- (**신소재**)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신규, 36억원)

○ (저탄소생태계) 탄소저감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유망기업 사업화** 등 **지원**

- (**인력양성**)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 신설**(474→591억원)
- (**유망기업**)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지원(477→665억원)

○ (순환경제활성화) **재자원화·재제조** 기술 개발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 (**재제조**)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신규, 43억원)
- (**재자원화**) 폐플라스틱·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본격 조성**(30→360억원)

【 취약계층 · 산업 · 지역의 공정한 전환 】 (0.3→0.5조원)

○ (노동전환)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뒷받침

- (**직무전환**) 재직 중 신산업 기술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내일배움카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 신규지원(2.5만명)
- (**전직지원**)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0.5만명),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인당 220만원) 지원(0.2만명)
- (**디지털 역량강화**) **K-digital Credit**(7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 확대

○ (사업재편) **사업전환·재편 기업**을 위해 **융자·펀드 0.5조원,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 선제 지원

- (**석탄발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 지원(300억원, 신규)

○ (지역·민간)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17억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인센티브**(16억원) 등 신규 지원

- (**지역**) 지역주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 광역지자체, 신규)
  90개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전략** 수립 지원(63억원, 신규)
- (**민간**)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16억원, 신규)
  학교 교육에서 **탄소중립 교육 강화**(9억원, 신규)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1.5→2.3조원)

○ (녹색금융) **녹색금융 7.6조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

- (**보증**) 기술보증기금(500억원, 신규), 신용보증기금(500억원, 신규)에 **탄소중립 보증 신설**
- (**융자**) **탄소중립전환 저탄소 설비 융자 지원**(1,500억원, 신규)
- (**이차보전**) **5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142.5억원, 신규)

○ (기술개발)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

○ (제도기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新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49억원) 등을 통한 **기반구축 지원**

*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합 계	**73,301**	**118,768**	
○ 경제구조 저탄소화	**49,835**	**82,653**	**전년대비 +65.9% 증가**
- 에너지 전환	11,414	19,213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3,133→3,324)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1,334	3,448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확대(222→879)
- 모빌리티 전환	22,987	36,539	·무공해차 보급 확대, 친환경 선박 등
- 도시·국토 저탄소화	14,100	23,44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943→6,075억원)
○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5,667**	**8,050**	**전년대비 +42.0% 증가**
- 신유망 산업육성	1,244	1,731	·시장선도형 CCU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신규, 6종)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2,685	3,601	·중소 유망기업 사업화 등 지원(477→665)
- 순환 경제 활성화	1,738	2,817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신규, 4개소)
○ 공정한 전환	**2,519**	**5,399**	**전년대비 +114.4% 증가**
- 취약산업·계층 보호	2,244	4,758	·노동전환 지원금(신규, 53억원)
-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	133	484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신규, 17개소)
- 탄소중립 국민 인식제고	142	157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등 도입(신규, 16억원)
○ 제도적 기반	**15,280**	**22,667**	**전년대비 +48.3% 증가**
- 녹색 금융 활성화	4,531	8,399	·7.6조원 규모 녹색금융 공급(보증, 융자 등)
- R&D 확충	10,571	13,947	·단계 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 기반구축	178	321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신규, 49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1. 기후대응기금 개요

□ (**신설목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 (**기금구조**)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수입** 등(수입) +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 으로 구성

세입	❶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0.7조원
	❷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7%)	1.2조원
	❸ 타 회계·기금 전입	0.8조원

세출	❶ 온실가스 감축	0.9조원
	❷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0.8조원
	❸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0.2조원
	❹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0.6조원

※ 세입·세출간 차액은 여유자금으로 활용

□ (**근거법률**) 「탄소중립기본법」(법사위 회부), 「국가재정법」(개정 추진 중) 등

2. 기후대응기금 투자방향

□ 「2050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

❶ (온실가스감축) **탄소저감 설비전환** 지원 및 **탄소흡수원 확충**

- (**산업**) **할당대상업체 감축설비지원**(222→879억원), **산단 열 공급업체 연료전환**(100억원, 신규)
- (**공공**)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161→613억원) / (**흡수원**) **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35억원, 신규)

❷ (탄소중립생태계) 저탄소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인력** 및 **금융 지원**

- (**유망기업·인재**) **탄소중립 기술인력양성**(폴리텍)(**신규 150억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263→375억원)
- (**녹색금융**) 탄소저감 **설비투자 자금 7.6조원** 수준 **공급**(신규 +0.5조원 수준)

❸ (공정한 전환) **취약 산업·고용·지역** 등의 **공정한 전환** 지원

- (**산업**) **사업재편기반구축**(89억원), **조선 기자재기업 업종전환 지원**(52억원)
- (**고용**) **노동전환지원금**(53억원, 신규),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50억원, 신규)
-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수립 등 지원**(63억원, 신규)

❹ (제도·기반)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 및 **제도** 등 **기반 구축 지원**

2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All Digital) (6.5→7.0조원)

◇ **메타버스 플랫폼**(240억원), **블록체인 실증**(308억원) 등 신산업 선도
◇ **AI 학습용 데이터 2배 구축**(누적 340→700종) 등 기존산업 디지털化

○ (디지털빅뱅)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 및 **공간정보**(10개 지역) 구축(140억원)

- **교통·쇼핑·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 길안내, 상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지원(100억원)

• (**제작 플랫폼**) 메타버스 서비스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한 SW 저작도구 개발**(40억)
• (**공간정보**) **사용자 관점**에서 **촬영**하여 사용자 친화적 메타버스 환경 제공(100억)
• (**서비스**) **현실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100억)
* (예) 교통(AR 네비게이션), 쇼핑(AR 상품가격 제공), 부동산(VR 모델하우스) 등

-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제작**하여 **AI 허브**에 **무료**로 **공개**하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확대(누적 340 → 700종, 6,732억원)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지원(2,425억원)

-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지원(308억원)

○ (생활디지털) AI 의료진단 SW인 **닥터앤서 1.0**(치매, 유방암 등)을 건강검진센터 등에 **보급**하고, **2.0**(폐암, 간질환 등)도 **개발**(154억원)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등 **재난발생**을 **예측**하고 **피해확산 범위**를 **분석**하는 **AI 솔루션 개발** 등 **AI+X 사업 확대**(7→9종)

• (**산림해충 방제**) 드론, 조사인력이 촬영한 산림영상, 재선충 이동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산림해충 고사목 탐지 및 발생 예측 지원(신규)
• (**화학 재난사고 대응**) 유해 화학물질 데이터, 위치·환경정보, 누출정보 등의 데이터를 센서, 영상 등을 통해 수집·가공해 재난발생 예측(신규)

-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도서관 등 논문·도서를 통합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71억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28억원)

* 25개 기관 통합 검색·로그인 서비스, 생애주기별 사용자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등

○ (K-사이버 방역)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하여 영세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백업 지원**(5,000개사, 55억원) 등 **전주기 지원**(1,117→ 1,266억원)

* 시스템·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 (**예방**) 사이버 감염 대비 **모의훈련 플랫폼 신규 구축**(15억원)
- (**탐지·분석**) AI 기반 **악성도메인탐지시스템 확대**(시범운영→ 6개, +27억원)
- (**대응·복구**)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현장분석·복구 신규지원**(1,100개사, 43억원)

○ (지역확산) **데이터센터** 구축, **AI특화 창업** 지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고급 SW인재양성**(300명, 신규) 등 **AI집적단지 구축**(709억원)

- **생산공정 최적화** 등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확대(1→ 3개 지역, 116억원)

- **농어촌, 복지관** 등에 **ICT 기술**(자동감지 CCTV, 스마트 기기 등)을 적용하여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 빌리지 확대**(6→ 10개소, 100억원)

- (**농어촌**) 자율작업 트랙터 실증, IoT 디바이스 통한 해녀 잠수데이터 수집
-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연계 Io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IoT 연계 LED 식물재배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합 계	**64,623**	**70,079**	
○ 디지털 빅뱅	**21,457**	**26,908**	
- AI학습용데이터구축	2,925	6,732	구축 종수 확대('21년 190 → '22년 360종)
○ 생활 디지털	**5,481**	**6,724**	
- AI정밀의료SW기반조성	-	54	닥터앤서 클리닉 도입,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확산
○ K-사이버 방역	**2,857**	**3,200**	
- 해킹바이러스대응고도화	527	633	AI 악성도메인탐지시스템 확대(시범운영→ 6개)
○ 지역 확산	**34,828**	**33,247**	
- AI중심산업집적단지조성	645	709	인프라(데이터센터 등) 구축, 인력양성 등 확대

3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4.7→6.2조원)

◇ **한국판 뉴딜 R&D 투자 48.1% 확대(2.4→3.6조원)**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신규) 등 우주개발 도약(0.5→0.6조원)**

구분	'21년	'22년	증감
· 전체 R&D	27.4조원	29.8조원	+8.8%
· 뉴딜 R&D (비중)	2.4조원 (8.8%)	3.6조원 (11.9%)	+48.1% (+3.1%p)

○ (뉴딜 2.0) **한국판뉴딜 기반 R&D** 투자 **48.1% 대폭 확대**(2.4→3.6조원)

- **디지털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AI**(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 지원(1.1→1.7조원)
- **탄소중립 2050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2,140→2,386억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선도기술** 투자(1.3→1.9조원)

○ (미래주력산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분야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을 위한 R&D 고도화(2.4→2.8조원)

- **차세대전력반도체**(192억원) 및 산업수요 특화 **첨단센서**(K-Sensor, 153억원) 등 **미래유망반도체** 전주기 R&D 신규 지원
- **백신개발** 등 감염병대응 기반구축(4,424→5,117억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2,483→3,820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 Lv4. **자율차 상용화**('27년) 및 **무공해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자율차 핵심기술***(0.2조원), **수소모빌리티 2.0**(206억원) 등 지원(0.5조원)

*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78억원, 신규), 차세대자율주행차량통신(53억원, 신규) 등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우주, 양자, 6G 등 **미개척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 투자 확대**(0.5→0.7조원)

- 세계 **7번째**로 **주력발사체** 개발 및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0.5→0.6조원)

- (**KPS**) **GPS 대체** 초정밀 위치정보제공 위성체계 개발(신규 845억원, ~'35년 3.7조원)
- (**발사체고도화**) 한국형발사체 발사 및 개량(신규 1,728억원, ~'26년 0.7조원)
- (**New Space**)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815억원) 등
- (**달탐사**) **달궤도선**을 통한 달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256억원)

- **양자컴퓨팅·센싱·통신, 6G** 등 미래 IT·NT의 **게임체인저 선점**을 위해 **투자 강화** 및 **한미 공동연구*** **추진**(459→927억원)

* 한·미간 양자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체결('21.5.22일)

○ (도전적 기초연구)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1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17) 1.26→('22) 2.55조원)하여 **국정과제 목표**달성

-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할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인문학** 등 **도전적 융합연구**(STEAM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205→369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뉴딜 R&D	**24,028**	**35,589**	
- 디지털 뉴딜	10,894	17,018	지능형메모리(PIM)인공지능반도체(신규, 509)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기술(신규, 371)
- 그린 뉴딜	13,134	18,57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2,140→2,386) 이산화탄소 포집·활용(11개 사업, 268→677)
○ 미래주력산업(BIG3)	**24,336**	**27,573**	
- 시스템반도체	2,890	3,992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신규, 72) K-Sensor 기술개발(신규, 153)
- 바이오헬스	17,560	18,858	국가신약개발(452→1,384)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1,903→2,038)
- 미래차	3,887	4,723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635→1,204) 수소 모빌리티 2.0(신규, 206)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5,085**	**7,277**	
- 우주	4,626	6,350	한국형발사체고도화(신규, 1,728)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신규, 845) 초소형위성체계개발(신규, 257)
- 양자	287	619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신규, 100)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신규, 72)
- 6G	172	308	6G핵심기술개발(172→308)
○ 도전적 기초연구	**23,689**	**25,857**	
- 연구자주도기초연구	23,484	25,488	개인기초연구(14,770→16,283) 집단연구지원(3,137→3,731)
- STEAM 연구	205	369	STEAM연구(205→369)

④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 양성 (1.6→2.0조원)

◇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11 → 16만명 양성
◇ 기업 주도 SW아카데미, 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폴리텍 학과개편(AI+x, 그린테크)

신기술 (분야수)	주요 분야	'21년	'22년
❶ 디지털 (8)	AI, 클라우드, 5G·6G, 빅데이터 등	8.1만명	11.4만명
❷ 산업기술 (6)	로봇·드론,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등	1.4만명	2.3만명
❸ 미래원천기술 (3)	수소, 양자, 우주	0.1만명	0.15만명
❹ 환경·바이오 (3)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1.7만명	1.9만명
계 (20)	-	**11.3만명**	**15.7만명**

○ (핵심인재 양성) ❶**산업 디지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주도형 SW 아카데미**(550명, 77억원), **산업전문인력 AI교육**(1.8→5.6천명, 180억원) 지원

- ❷**산업기술 개발·발전**을 위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284억원) 등 양성
- ❸**양자·우주·로봇·UAM** 등 **미래원천기술**을 선도할 **양자정보과학 인재** 양성(71억원) 및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 개소**(91억원)
- ❹**환경·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갈 생물소재개발·생태복원 등 **녹색융합 기술 인재양성**(161억원), **혁신·융합형 의사과학자**(237억원) 지원

○ (실전형 인재교육) **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4,070억원)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600억원)

-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 등으로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확대**(832→890억원)
-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인재 **해외연구경험** 제공, **해외인재 국내 유치, 해외연구자 교류** 등 추진(717→807억원)

- (**국내→해외**) 글로벌인재양성 지속 지원(ICT·산업·에너지·보건 등, 373억원)
- (**해외→국내**) 해외우수과학자유치(BrainPool)(306→374명, 301→361억원)
- (**교류지원**) 우수연구자 교류지원 사업(BrainLink) 신설(73억원)

○ (신기술 직업훈련) 기업 참여 **디지털 직업훈련**(1.7→2.9만명), 중소기업 자체 인재양성(S-OJT) 등 **기업주도 직업훈련 확대**(0.2→0.5조원)

- **디지털 기초교육 제공**을 위해 **K-Digital Credit**(4→7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28→100만명) 등 **확대**

- **AI+X·그린테크** 등 **폴리텍 학과개편, 직업계고 심화교육** 확대(8→48개), **K-Digital Platform** 추가(5→20개소) 등 **인력양성체계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핵심인재 양성	**11,884**	**16,164**	
- 기업주도 SW아카데미	-	77	대학을 활용한 기업주도 SW 훈련 신설(550명)
- 산업전문인력AI역량강화	54	180	재직자 등 AI 융합교육 확대(1,800→5,600명)
-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195	284	반도체 설계·품질관리 등 인력양성(625→852명)
- 양자정보과학인재	39	71	양자정보과학 분야 고급인력 양성(46→50명)
- 미래우주교육센터	26	91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 개소(100→465명 양성)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123	161	녹색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1,872→3,180명)
- 혁신융합 의사과학자	143	237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420→979명 양성
○ 실전형 인재교육	**5,449**	**6,367**	
- 산학연계 LINC 3.0	3,902	4,070	지원유형 재설계 등 산학연 협력 고도화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	600	9개분야, 4,300명 양성지원
- 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832	890	8개 컨소시엄 지원으로 10,000명 양성
-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717	807	해외연구경험 제공 등 814→840명
○ 신기술 직업훈련	**2,014**	**4,669**	
- 기업 참여 디지털 훈련	1,390	3,298	K-Digital Training 1.7→2.9만명 지원
- 중소기업 자체 인재양성	93	147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S-OJT) 지원(150→1,025개소)
- K-Digital Credit	200	350	구직자 디지털 기초교육 지원 확대(4→7만명)
-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52	188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확대(28→100만명)
- 폴리텍 학과개편	121	202	AI+X학과 10개, 그린테크 5개 신설·개편
- K-Digital Platform	50	175	K-Digital Platform 15개소 추가 지정

※ 실전형 인재교육 2,297억원, 신기술 직업훈련 4,669억원은 혁신인재 양성과 중복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 진화하는 뉴딜 :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 + 사람 중심 휴먼 뉴딜

⇨ '22년 국비 투자 33.7조원(+12.7조원)으로 확대

구 분	'20추경~'21 기투자 (국비)	'22년(안) (국비)	'20추경~'25계획 (국비)	'20추경~'25계획 (국비+지방비+민간)
합 계	32.5조원	33.7조원	160조원 수준	220조원 수준
1. 디지털뉴딜	10.8	9.3	49조원 수준	67조원 수준
2. 그린뉴딜	10.3	13.3	61조원 수준	97조원 수준
3. 휴먼뉴딜	11.4	11.1	50조원 수준	56조원 수준

❶ (디지털)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9.3조원)

- (**D.N.A 생태계 강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340종→700종) 확대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 ('22년 6.2조원)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 (0.5조원)
- (**신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 (0.8조원)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1.8조원)

❷ (그린) 탄소중립을 위한 확대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뒷받침 (13.3조원)

- (**신규 탄소중립 기반 구축**)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 마련 ('22년 1.1조원)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린 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761동, +5,133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등 녹색 전환 성과 안착 (3.5조원)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 등 확대 (6.8조원)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및 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 (1.9조원)

❸ (휴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11.1조원)

- (**신규 청년정책**)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22년 2.2조원)

  *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신규),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신규),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신규)

- (**신규 격차해소**) **기초학력 향상**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격차 해소** (1.3조원)
- (**사람투자**) **AI·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확대(3.5→5.9만명) 및 K-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2.9만명** 양성 (2.0조원)
- (**안전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5.6조원)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2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1년	'22년
스마트강군 국익증진형 외교	첨단 미래무기 신규개발	169개	352개
	병 봉급(병장기준)	60.9만원/월	67.6만원/월
	병 급식단가	8,790원/일	11,000원/일
	융합 ODA	19개 부처 85개 프로그램	23개 부처 102개 프로그램
백신·방역	코로나19 mRNA백신확보	1.06억회분	1.2억회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4개소	5개소
	백신자주권 확보	임상지원중 (임상1~3상 7종)	임상완료 (1종 이상)
재난재해 대응 환경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5개소	55개소
	정신응급의료센터	-	8개소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430동	3,532동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36만대
사회적 약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105개소	140개소
	입양아동 위탁보호비 신설	-	100만원/월
親 가족	아동수당 지급대상	7세 미만 (83개월)	8세 미만 (95개월)
	영아수당 신설	-	30만원/월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시 200만원

1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58.5→61.2조원)

◇ 첨단전력·전투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4.7조원)
◇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융합ODA 확대 등 국익 증진 외교

【 스마트강군 육성 】 (52.8→55.2조원)

○ (첨단전력)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투자 대폭 확대**(4.3→4.9조원)

- 초소형위성,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 및 장거리 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미사일전력 R&D 집중 투자**(1.6→1.7조원)

  * 초소형위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R&D 등

- **미래戰** 대비 **스텔스탐지·레이저요격** 등 게임체인저급 무기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등 국내 개발 강화**(0.6→1.1조원)

- 안보+산업육성 효과가 큰 **안보전략기술*의 민군겸용 개발** 및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활용 중점 지원**(0.1→0.2조원)

  * 통신·탐지용 화합물반도체, 인공혈액제재, 초고탄성 탄소섬유 등 6대 과제

○ (軍 사기진작) **전역시 최대 1천만원 목돈, 병봉급**(병장 기준, 60.9→67.6만원)·**급식비**(8,790→11,000원) **인상** 등 **사기진작 종합** 지원(3.9→4.7조원)

(단위 : 억원)

	지원내용	예산	
		'21년	'22년案
계		**39,058**	**46,931**
①인건비	• 병장 월 60.9→67.6만원	22,326	23,324
②급 식	• 급식단가 인상(8,790원→11,000원/일) • 민간조리원 확충(2,278→3,188명) 등	11,773	13,713
③자기개발비	• 자기개발비 병 70→100%, 단가 10→12만원 • 온라인 학점취득 학기당 6.3→10만원 • 학군후보생 역량강화비 신설(8만원, 4~8개월)	248	459
④사회복귀준비금	• 장병3 : 정부1 매칭 → 전역시 최대 1,000만원 수령	-	2,165
⑤주거여건	• 조립식/교육생 침상형 생활관 개선 36→41동 • 간부숙소 4,890→5,934실	1,990	3,923

○ (스마트 국방혁신) **실전형 훈련**을 위한 **VR·AR 모의훈련체계 확대**(13→22식) 등 **스마트 훈련 투자 강화**(1,055→1,834억원)

- **첨단 IT기술**을 부대운영에 접목하여 **장병·물자 관리, 부대 운영** 스마트화(458→744억원)

- **국방분야 혁신을 견인**할 AI·SW 핵심인재양성(58→130억원)

○ (방위산업 육성) **유망 국방벤처 육성**, 방산업체 **수출경쟁력 강화** 및 **방산기술 보호** 등 중점 지원(1,655→2,717억원)

- 軍적용 가능 기술개발(103→140억원), 전차·자주포 등 해외 수출무기의 부품 국산화지원(886→1,691억원) 등 **국방 중소·벤처 육성 강화**

- **수출 가능 무기체계의 개조 개발·해외시장조사** 등 지원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 글로벌 진출 확대 추진**(519→638억원)

- 중소기업·출연연 대상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확대**를 통해 방산기술 적극 보호(53→13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국방R&D 투자 확대	**43,314**	**48,841**	
- 첨단 무기체계 개발	15,517	17,288	감시·정찰, 미사일 분야 첨단무기 집중 투자
- 핵심·미래도전 기술	6,318	10,512	미래 첨단 무기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 민군기술협력·신속연구	908	2,247	민·군 겸용기술개발 및 민간기술 신속 국방 활용
○ 스마트 국방혁신	**1,571**	**2,708**	
- 과학화 훈련체계	1,055	1,834	마일즈장비 29→38식, VR가상훈련장비 13→22식, 과학화훈련장 신규 4개소 등
- 국방운영 스마트화	458	744	스마트부대 등 기술기반혁신, AI 영상판독 지원체계 등 운영체계혁신
- 핵심인재양성	58	130	국방분야 AI·SW 핵심인재 100명 양성
○ 군 사기진작	**39,058**	**46,931**	병 봉급 11.1%·급식비 25.1% 인상, 자기개발비·온라인 학점취득 지원한도 상향 등
○ 방위산업 육성	**1,655**	**2,717**	기술개발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무기개조개발, 방산기술유출방지 지원 등

【 국익증진형 외교 】 (5.7→6.0조원)

○ (국익외교)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4~'25) **진출 추진**(10억원), **수교기념 행사 확대**(+46억원) 등 **국익추구 외교** 지원

- 해외체류 정상화 대비 **여권 제조·발급**(+210억원, 590만권) 확대 및 자국민 보호 영사조력 확대(+15억원) 등 **외교 행정 서비스 강화**

- **한-아프리카 재단 지원**(+10억원), **중남미국가 교류협력 강화**(+7억원) 등 외교 다변화로 **우리 기업 신시장 진출 여건** 조성

- **신북방 미래개척단**(+1억원), **차세대 신남방 교류**(신규 2억원), **글로벌 챌린저 성장사다리**(+13억원) 등 **우리 청년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통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311억원, 신규) 및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64억원), **통일⁺센터** 확대(+24억원) 등 **통일기반 확충**

-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간 **민생협력**(256억원), **사회문화교류**(55억원) 지원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안정적 **남북협력기반 구축**

- **DMZ 평화의길** 인프라(+64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신규 32억원)', **통일⁺센터** 확대(경기·충청, +24억원) 등 **통일행정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확대(+22억원), **청소년학교** 지원(+2억원)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국익외교	**28,409**	**30,023**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775	1,018	· 여권제조 및 발급(+210억원), 차세대 전자여권 노후시스템 개선(+32억원)
- 국제사회 우리위상 제고	40	82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신규10억원), · 주요외교 계기기념행사(26→74공관, 50개국)
- 재외국민보호	138	146	· 무자력자 긴급(+4억원), 긴급대피 (+10억원)
- 우리 기업·청년 해외 진출 지원	81	112	· 한-아프리카재단 지원 등(+10억원), · 글로벌 챌린저 성장사다리(신규 13억원, 100명)
○ 통 일	**14,749**	**14,998**	
- 지자체 남북협력 지원	-	311	· 민생협력지원(신규 256억원) · 사회문화교류 지원(신규 55억원)
-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	12	·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구축(신규 12억원)
- 통일행정 서비스 강화	30	157	· DMZ 평화의길 인프라 조성 등(+89억원) · 지역 통일⁺센터 추가(경기, 충청) 설치(+24억원)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신규 32억원) ·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신규 12억원)

○ (전략적 ODA)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1.0→1.2조원) 중심으로 **ODA 규모 확대**(3.6→4.0조원)*

*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추진(G20 정상회의, '19년 6월)

- **원조 효과**가 **큰** 그린·디지털·보건 및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인프라·역량 강화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 ODA*** **확대**(0.3→0.4조원)

* (**융합 ODA**) 필리핀 홍수 예방을 위해 예·경보 마스터플랜(환경부) + 홍수 조기 예·경보 시스템(외교부 등) + 감시·예측 통합플랫폼(기상청) 종합지원

- WHO·GAVI* 등과 **글로벌 백신협력 강화**(478→710억원) 및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COVAX AMC 1억불**도 차질없이 **공여**(1,131억원)

*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 **대외정책 성과 도출, 경제협력 확대** 등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0.87→0.92조원)

○ (청년·기업 지원 ODA) **청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및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823→1,133억원)

- WFK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등 **개발협력 참여**(538→797억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자원봉사단 등 **인재 양성**(111→121억원) **확대**

-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위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55→74억원),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119→140억원) 등 **협력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ㅇ 전략적 ODA	**36,811**	**40,259**	
- 그린·디지털·보건	10,310	12,439	· 그린(+304억원, +5.7%), 디지털(+773억원, +25.7%), 보건(+959억원, +33.6%)
- 융합 ODA	3,248	3,952	· 23개 부처, 102개 프로그램(+17개) · 그린·디지털·보건 +21개, +825억원
- 글로벌 백신협력 강화	478	1,841	· WHO, CEPI, GAVI 등 국제기구 협력(+232억원) · COVAX AMC 1억불 공여(1,131억원)
- 신남방·신북방	8,673	9,180	· 신남방(아세안, 인도 등), 신북방(중앙아시아, 몽골 등) 지원 확대(+507억원)
- 청년 지원	650	918	·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등(2.9→3.4천명)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유엔자원봉사단 등 파견 확대(90→100명)
- 기업 지원	173	214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26→28건)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35→43건)

2 백신 · 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0.8→5.8조원)

◇ '22년 ❶백신 9천만회분 구입 및 ❷국산백신 개발 지원,
❸금년 백신 잔여물량 활용을 통해 전국민에게 충분한 백신물량 확보

◇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균형 있는 지역 방역대응 체계 구축

○ (백신 구매·접종) **변이바이러스 심화, 공급 불확실성** 등 대비하여 **총 9천만회분**(mRNA 8천만회분 + 국산백신 1천만회분) **신규 구매**(2.6조원)

- '21년 **잔여백신 이월분 8천만회분**까지 합하여 전국민 접종에 충분한 **총 1.7억회분***을 **확보**할 예정

  * mRNA백신은 전국민 2회 접종물량 이상의 1.2억회분 확보

-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0.4조원), 백신 **보관·배송** 및 **접종물품비**(0.2조원) 등 전국민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0.3→ 0.4조원)

○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확보** 및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全단계** 지원(1.8조원)

- **감염병** 대비 **병상 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0.7조원, 신규),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0.1조원, 신규)

- 무증상 확진자 선별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0.5조원, 신규), **방역물품비축 및 생활지원·유급휴가 지원** 등(0.3조원, 신규)

○ (지역 방역체계 고도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구축*,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22개소)

  * 호남·충청·경남권 설계 중('22년 착공), 경북권 설계 예정('23년 착공), 추가 1개소 공모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 **설치**(14억원, 신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축**(112억원) 등을 연계한 **전국단위 협업체계 마련**

- **신속·안전한 후송**을 위해 **음압 구급차** 55대 **신규 도입**(63억원)

○ (백신 자주권 확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신·변종 감염병** 선제 대비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 등 **R&D 투자** 확대(0.4→ 0.5조원)

-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385억원, 신규), **암**(癌)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332억원, 신규) 등 **연구개발**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前임상**(80억원)·**임상시험**(893억원) **지원**도 지속

- **현장 안전**을 위한 **시스템·장비** 등 **운용체계 고도화**(108억원, 신규),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등 **방역 인프라** R&D 투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ㅇ 백신구매·접종	**3,478**	**35,279**	
- 해외백신 구매	-	24,079	• mRNA 백신 8,000만회분 구매
- 국산백신 선구매	-	1,920	• 국산백신 선구매 1,000만회분 예상잔금
- 예방접종 시행비	-	4,057	• 5,000만명 대상 예방접종 시행비
- 예방접종 물품 등	-	1,474	• 백신유통비, 주사기 등 접종물품 등
- 국가예방접종 실시	3,478	3,749	•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어린이필수17종 등
ㅇ 병상확보 등 방역지원	**162**	**15,359**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7,200	• 치료병상 1만개 규모 확보
- 생활치료센터 운영	-	900	• 중수본 17개소, 지자체 20개소
- 위기상황종합관리	162	7,259	•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방역물품 비축 등
ㅇ 지역방역체계	**765**	**621**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59	266	• 5개소(호남, 중부, 경남, 경북, 공모)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	14	• 5개소(수도권, 호남, 충청, 경북, 경남)
-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	105	112	• 감염병 관리지원(7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지원(30억원) 등
-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201	229	• 시설확충 222억원, 장비지원 7억원
ㅇ 백신자주권 확보	**4,424**	**5,117**	
- 신변종감염병대응등	1,654	2,459	• 차세대 백신플랫폼 기초원천 기술, mRNA 백신 임상·前임상, 암 등 공공·치료용 백신 개발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429	1,021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前임상시험
- 방역대응체계R&D 및 감염병연구생태계	1,341	1,638	• ICT 활용 감염병 현장 안전 시스템, 방역·진단기기 국산화 기술개발 등

3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20.9→21.8조원)

◇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등 3대 재난안전에 20조원 이상 투자
◇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점 투자

【 자연재해 피해 예방 】 (5.0→5.3조원)

○ (풍수해) 기후변화 위험 대비, **풍수해생활권 정비**(35→55개소),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1.0→1.1조원) 등 **사전적 예방 투자 확대**

- **AI 기반 위험예측 기술개발**(31억원, 신규), LTE 기반 **재난현장 영상 기반 공유통신망**(18억원, 신규) 등 **첨단기술도 접목**

○ (산림재해) 임업자원·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산사태, 산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임도**(271→371㎞) **건설 확대**

- **산불 감시·진화**를 위한 산림청 노후헬기(1대)도 교체(75억원)

○ (지진) **소방청 지진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 지원(5→ 71억원), **노후철도 내진보강**(39→ 17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풍수해			
- 재해위험지역정비	5,205	6,043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신규 20개소) •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5,000개소)
- 수리시설 개보수	6,365	6,818	• 수원공개보수(318지구), 배수로개보수(266지구)
- 국가하천정비	3,523	4,100	• 152개 지구(1,870km) 중 37개 지구(113km) 정비
○ 산림재해			
- 사방사업	1,628	2,267	• 사방댐(390→704개소), 산지사방(159→200ha)
- 임도시설	1,093	1,373	• 산불예방임도(100→150km), 간선임도(171→221km)
- 산림헬기 도입·운영	663	698	• 노후헬기 교체(신규, 1대) • 중형헬기 노후물탱크 교체(신규, 3대)
○ 지진			
-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5	71	• 권역별 훈련시설 등 조기 구축('25→'24년)
-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31	47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신규, 16억원)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39	176	• '21년 47개소 설계 → '22년 38개소 공사

【 사회위험에서 국민생명보호 】 〔13.1→14.1조원〕

○ (자살)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1.5만명) **마음건강 바우처**(57억원, 신규) 등 **마음투자 확대**(0.26→ 0.3조원)

- (**정신건강 응급관리**) 8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19억원) 정신응급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19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치료
- (**건강복지 인프라**) 정신건강복지센터 228→245개 확충(689→732억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서·관계 회복 지원
- (**자살예방 안전망**)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상담인력보강(+23명)

○ (교통사고) 교통사고 다발 위험도로 개선(1,486→1,549억원) 및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단속장비 확대(누적 0.8→1.6만개)

○ (산재·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계기로, **영세 사업장 3대 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전면교체 지속**(0.5만개, 0.3조원)

- **끼임·추락 방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융자**(1.5만개소, 0.4→0.5조원)
- SW 프리랜서·대학원 연구생 신규 지원 등 **산재보험 확대**(6.5→ 7.1조원)

-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어린이집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확대**(57→459억)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자 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368	450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확충(57→80명) 및 응답률 개선(30%→75%)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서비스	58	141	• 8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신설 •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확대 등
○ 교통사고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5	9,174	• 교량보수(1,137→1,359개소) • 내진성능평가(365개소, 신규)
- 위험도로 개선	302	365	• 36개소 개선
○ 산재·화재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273	4,509	• 제조·서비스업 2.9→4천개소 확대 • 건설업 6.9→8.9천개소 확대
- 산재예방시설융자	3,228	3,563	• 융자대상 1.8→2.2천개소 확대
- 화재안전 성능 보강	57	459	•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430동→3,532동)

【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2.8→2.4조원)

○ (수질) ICT·AI 기반 **하수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 **스마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204→836억원)

- **수돗물 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22년, 2,490억원), **노후상수도 정비**('22년 4,518억원) 지속 추진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해양방사선물질 감시 강화**(778→919억원),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도입(15대, +33억원)도 지원

○ (대기) 차량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34→36만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23→61만대) 확대

○ (폐기물) **고품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확대, 충청권 재활용시설 설치 등 **재활용 수거·선별 인프라 고도화**(364→464억원)

- **열분해시설**(4개소, 설계비 등 10억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3개소, 설계비 9억원)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新유형 처리시설 확충**

-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친환경부표 교체**(200→400억원),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기술개발**(+73억원, 신규)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안)	비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	204	836	취수원 수질감시 24개소, 정수장 스마트화 8개소, 스마트 관망 14개소
-스마트 지방 상수도	4,676	2,490	정수장 위생관리(412→436억원)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개량(8,747세대)
-노후상수도 정비	4,615	4,518	노후상수관망 개량(95개소) 노후정수장시설 현대화(31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3,264	3,45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4만→36만대(160만원, 60%)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2,056	1,48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1,500→1,130억원)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300	396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23→61만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269	1,306	매립·소각시설 등 (계속 79개소, 신규 21개소)
-재활용 수거 인프라	364	464	충청권 재활용 시설 설치(설계비 등 23억원) 재활용동네마당 확충(240→400개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339	411	수거(19→22만톤), 처리(8→12만톤)

4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0.2→0.3조원)

◇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및 1천억원 이상 투자**

◇ **위기아동·청소년·여성·외국인 및 범죄예방·인권보호를 위한 투자 강화**

【 위기아동 지원 강화 】 (0.1→0.2조원)

○ (학대아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각각 분산되었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지원투자 적극 확대**(727→1,024억원, +40.9%)

- **공동생활가정**(505→517개), **학대피해아동쉼터**(105→140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81→95개) **대폭 확대**(+220억원)
- **치유·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524→715명) 및 **심리치료**(2,000→4,750명) **확대**, **가족방문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1,000가정, 22억원)

- (**인프라**) 준공 15년 경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보수**(각 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단가 인상(33%)
- (**조사지원**)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의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 지원**(229개 시군구 각 1대)
- (**치료지원**) 중대사건 전문치료 등 수행 **거점전담의료기관 신규 지정**(8개소)

○ (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전담기관 신설**(515→916억원)

- **자립수당**(30만원) **지원기간 3 → 5년 확대**(+53억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 1:1 → 1:2**(월 10만원) **상향**(250→554억원)
-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전담요원 120명 배치),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기관당 2억원, 신규 64억원)

○ (입양아동)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입양 前 **위탁보육가정에** 국고로 **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지원(19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ㅇ 학대아동	727	1,024	• 학대피해아동쉼터 105→140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81→95개소, • 아동보호전담요원 524→715명
ㅇ 보호종료아동	515	916	• 자립수당(月 30만원) 지급기간 확대(3→5년), 전국 17개소 자립지원 전담기관 신설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매칭 상향(1:1→1:2) 정부지원한도 상향(5 → 10만원/月)
ㅇ 입양아동(가정위탁 지원)	-	19	• 위탁보육가정 입양아(463명) 보호비(월 100만원)

【 청소년 · 여성 ·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0.12→0.13조원)

○ (위기청소년)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상향(18→24세), 방임아동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확대**(+1.8천명) 등 실시

- 저연령(초·중)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및 사회성 강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신규, 6억원)
- **청소년부모** 자녀양육지도,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신규, 10억원)

○ (여성·외국인)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새일인턴**(8천명) 인턴지원금, 고용·취업장려금 총 380만원 지원(236억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결혼이주여성 채용**(7백명), **외국인 고용 사업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 확대**(0.3→1만명)

○ (범죄예방·인권보호) 신종범죄 초기대응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3배 확대**(0.3→1만대), **보이스피싱 탐지기**(10억원, 신규) 등 지원

- **인권친화적 환경**을 위해 **아동·여성·장애인 전용조사실 확대**(35→50개), **교정시설 확충**(+810명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억원, 신규)

-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 상담소** (7→10개소), **디지털 스토킹 예방활동**(신규 2억원) 등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 위기청소년	**73**	**93**	
- 가족역량강화지원	-	10	· 청소년부모 가족상담 등 통합사례관리 추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4	21	· 학교밖 청소년 등 자립지원(만18→24세)
○ 여성·외국인	**567**	**571**	
- 다문화가정 자녀 국내적응 지원	-	37	· 다문화 자녀 대상 취학준비 학습, 진로, 취업 컨설팅, 전문심리상담 등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외국인력고용지원	1	4	· 인권보호 교육 확대(0.3→1만명)
○ 범죄예방·인권보호	**517**	**628**	
-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강화	153	244	· 여청수사팀 전용조사실 확대(35→41개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13→16억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9	92	· 전담변호사 확대(23→35명, 전담률 13→24%)

5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5.1→6.6조원)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 → 8세 미만까지 확대(+0.4조원)**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1조원 투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균형 지원**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돌봄비용 부담 경감(+43만명, +0.4조원*)

* 아동수당 확대소요 : 0.53조원(국비 0.39조원, 지방비 0.14조원)

** (도입) '18.9월 6세 미만 → (1차 확대) '19.9월 7세 미만 → (2차 확대案) '22.1월 8세 미만

※ 현행 7세 미만 아동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반영

○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영아 수당, 셋째자녀 이상**(중위 200% 이하) **등록금 전액지원**(기초·차상위는 둘째부터) 등 적극 투자(2.7→ 4.1조원)

❶ **(0-1세 영아수당) 月30만원 신규지급**(0.4조원)
'25년까지 月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❷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1회 신규지급**(0.4조원)

❸ **(육아휴직) 3+3 공동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月120→ 150만원**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상향** 등 (1.3 → 1.7조원)

*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사업자가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시 3개월간 200만원 지원

❹ **(공보육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600억원)

* 공보육 이용률 목표, 공보육 이용률 ('22) 40% → ('23) 45% → ('25) 50%

❺ **(다자녀 지원)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0.8 → 0.9조원),
다자녀 전용임대주택**(0.5 → 0.7조원)

* 기준중위 200%이하 셋째자녀 이상(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지원), 연 520만원 → 전액, 0.9조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0.5만호 공급

○ (모자건강관리)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 바우처 확대**(60→ 100만원) 및 **청소년 산모 추가 지원**(120만원)

- **고위험 임산부·영아가정**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30→41억원)

○ (일·가정 균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확대**(30인 이상→전사업장), **유연근무 확산**** 등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적용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 장려금 지원(1→1.3만명)

**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1.1만명) 및 재택근무 인프라 등 지속 지원

- **워킹맘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 **확대**(7,593→ 8,559명, 383→417억원)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83개소) **지원**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휴가급여**(최대 200만원) **지원** 확대(1,709→4,543명, 86→22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案	비고
ㅇ아동수당 지급	**22,195**	**24,039**	8세 미만 273만명, 월 10만원 지원
ㅇ친가족 5대 패키지	**27,014**	**40,790**	
- 영아수당	-	3,731	'22년 출생아 27.5만명, 월 30만원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3,731	'22년 출생아 27.5만명,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활성화	13,401	16,928	육아휴직급여 12.0→12.8만명 지원 부모공동육아휴직급여 0.6만명 지원(신규)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 1.6→1.9만명 지원
- 어린이집 확충	609	609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13,004	15,791	기준중위 200%이하 다자녀 셋째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ㅇ모자건강관리	**33**	**46**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	5	만 19세 이하 산모(760명, 120만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30	41	고위험군 임산부, 만 2세 영아 가정 지원
ㅇ일·가정 균형	**1,281**	**1,400**	
- 근로시간 단축지원	182	241	워라벨 장려금 지원물량 확대(1.0→1.3만명) 사업자 간접노무비 지원단가 상향(20→30만원)
- 유연근무 확산	259	180	사업자 간접노무비 지속 지원(1.1만명, 30만원) 재택근무 도입 인프라·컨설팅 지속 지원(450개소)
- 워라벨 인식제고	24	24	노동시간 단축 현장방문 컨설팅(140개소) CEO 등 대상 일·생활 균형 교육 제공(140명)
- 직장어린이집지원	347	309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신규설치 94→83개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3	417	지원인원 7,593 → 8,559명 확대
- 특고 출산휴가급여	86	228	지원인원 1,709 → 4,543명 확대

Ⅳ. 3대 재정혁신

1 재정지출 재구조화

□1 (지출구조조정)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

○ 정책 환경 및 **사업수요변화**를 반영,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액**하여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

< 구조조정과 재투자 예시 >

금융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1.5조원) ⇨	(+) 저신용자·청년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0.8조원), **혁신벤처·창업 경쟁력** 강화(+0.2조원)
고용	(-)한시 일자리·생계 유지(△1.1조원) ⇨	(+) **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0.3조원), 그린·디지털 맞춤형 **노동전환 지원**(+0.4조원)
국방	(-)국방개혁2.0 등 병력감축(△0.3조원) ⇨	(+) 병봉급인상, 급식질 개선, 사회복귀준비금 등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0.8조원)

○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대 경상경비***를 **'21년**에 이어 **'22년**도 **추가 절감**(△2.2%)하여 **고통분담**에 **동참**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a)	'22년 예산안(b)	증감 (b-a)	%
4대 경상경비*	7,952	7,509	7,381	△128	△1.7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2 (보조·출연금 정비) 3년 이상 지원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사업효과성** 등을 **재평가**하여 **감축·폐지**(△0.3조원)

○ 그동안 **관행**적으로 결정되던 **보조율 체계**를 개편, **신규 자부담 설정, 자부담율 확대** 등 민간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출연기관**의 **수입**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그간 누락했던 자체 수입을 발굴하여 **61개 기관**의 **운영비성 출연금** 절감(△0.2조원)

○ 기관·사업별로 **분산**된 **R&D 출연금**의 **기획평가관리비**도 25개 사업으로 **통폐합·효율화**(△208억원)

2 협업예산 고도화

□ 다부처 협업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12개→ '22년 17개 과제로 확대

○ ❶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❷노동·자영업 구조전환 지원, ❸혁신 인재 양성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40% 이상 증액(9.9→ 13.9조원)

○ 거의 모든 전부처가 공동과제 발굴·기획·집행 등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재정혁신 성과 창출

<4대 부분>	< 17대 협업과제 >		<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쟁력 확보	❶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0.2→ 0.7조원) ❷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251→ 448억원) ❸융합 ODA 2.0 (0.3→ 0.4조원)	⇒	· '22.上 국산백신 개발 · 4대 브랜드 新수출 전략 · 102개 ODA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공정한 전환	❹산업구조변화 대응 노동전환 (0.4→ 0.8조원) ❺포스트코로나 자영업 구조전환 (0.5→ 0.6조원) ❻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77→ 104억원) ❼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2.4→ 2.6조원) ❽지역경제거점 도약, 혁신도시 2.0 (771억원, 신규)	⇒	· 직무전환+전직지원 · 생계형→성장형 구조 · 주요 작물 데이터 수집 · 지역 생활수준 제고 · 10대 브랜드 사업
미래혁신 산업·인재 육성	❾K-반도체 전략, 시스템반도체 지원 (0.3→ 0.4조원) ❿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0.8→ 0.9조원) ⓫친환경·자율주행차 개발 (2.0→ 3.4조원) ⓬우주·항공 산업 전략 육성 (0.7→ 0.9조원) ⓭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1.2→ 1.6조원) ⓮고등교육 신기술 인재 양성 (0.6→ 0.7조원)	⇒	·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 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 2030 우주항공 G7 · 신기술 인력부족 해결 · 산업수요 맞춤 대학 교육
인권보호·국민안전	⓯학대·보호종료·입양 아동 지원 (0.1→ 0.2조원) ⓰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 서비스 강화 (18억원, 신규) ⓱첨단무기 분야 민군기술 협력 (0.4→ 0.7조원)	⇒	· 안정적 가정 복귀 · 재난현장과 실시간 소통 · 인공혈액 등 기술개발

3 국민공감예산

□ (현장공감) 학대피해아동 쉼터(105→140개),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1,000명), 한센인 소록도병원 의료장비 교체 등 소외·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 (국민참여)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수산물 현장검사,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 국민제안 생활밀착형 참여예산 확대(0.12→0.14조원)

※ 예산편성 全과정에서 수요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분야별·권역별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여 「국민공감예산」 편성

[17대 협업예산 (9.9→ 13.9조원)]

1 K-글로벌 백신허브 (0.2→ 0.7조원, +229%)

○ (필요성) 글로벌 보건안보로서 백신 자주권 확보 필요

⇨ ❶ '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❷ '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1년 9위)

○ (협업내용) 범정부 총력지원을 통해 단기 생산역량, 국내백신 개발, 전문인력 등 생태계, 글로벌 협력 등 4대 부문, 0.7조원 투자

2 한류 연계 K-브랜드 수출 지원 (251→ 448억원, +78%)

○ (필요성) K-Pop, K-Movie 등 글로벌 한류 붐업과 연계하여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제품)의 新 수출전략 수립

○ (협업내용) 문화(문체부)·한식(농식품부)·미용(복지부)·제품(중기부) 등 4대 브랜드 대상 기획-유통-마케팅-브랜드 관리의 全단계 지원

3 융합 ODA 2.0 (0.3→ 0.4조원, +22%)

○ (필요성) 융합 ODA 도입으로 분절적 원조체계 극복 및 원조효과 제고 등 성과 → 규모·투자 분야 등 업그레이드 필요

○ (협업내용) 국조실·기재부·외교부·사업부처 등 ODA 추진기관 사전(N-2년부터) 협력, 정부·시민단체·기업 연계, 현장성 제고

- 85→ 102개 프로그램(23개 부처) 확대 + 국내기업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의료 비중 확대(51.8→ 63.7%)

4 사업재편분야 노동전환 지원 (0.4→ 0.8조원, +120%)

○ (필요성) 저탄소·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석탄발전 산업은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 우려

○ (협업내용) 사업재편기업의 선제적 발굴 + 범부처 종합지원

- 사업재편 분야 재직자 15만명의 ❶직무전환(중장기 유급훈련 등)·❷전직지원(중장년 '새출발크레딧' 등)·❸디지털역량 강화 등 지원

5 포스트코로나 자영업 구조전환 (0.5→ 0.6조원, +16%)

○ (필요성)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생계형 구조" 계속**

○ (**협업내용**) **"생계형→성장형으로 구조전환"**을 위해 ❶원활한 **폐업·재취업**, ❷新사업 **창업·재창업**, ❸**디지털·스마트化** 지원

6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77→ 104억원, +35%)

○ (필요성) 급성장 중인 **新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확산·발전**을 위해 부처별 **데이터, 플랫폼, 인력양성** 등 **협업 추진 필요**

○ (**협업내용**) 농업 현장 적합 모델 **기술개발** + AI 경진대회 개최

7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2.4→ 2.6조원, +9%)

○ (필요성)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50% 초과** 등 **인구감소·불균형 심화 → "지방소멸" 우려 확산**

○ (**협업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정**(10월 예정)과 연계, 범부처 차원 **일자리, 정착, 공동체, 생활여건, 기반조성**에 **2.6조원 투자**

8 지역경제거점 도약, 혁신도시 2.0 (771억원, 신규)

○ (필요성) 혁신도시 자립 기반을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협업내용**) 대표 **브랜드 사업 10개 선정**하고, **부처 사업간 연계**를 통해 **'유입→정착→성장'**을 **全주기 지원**

- **메뉴판 방식 지원**(공모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도 **신규 도입**

9 K-반도체 전략, 시스템반도체 지원 (0.3→ 0.4조원, +38%)

○ (필요성) **'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1위** 등 **반도체 종합강국 도약**

⇨ ❶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1위, ❷ 세계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❸메모리반도체 초(超)격차 유지

○ (**협업내용**) **차세대 반도체 4대 핵심기술**(지능형반도체 등) **개발**,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3.6만명**, 기업성장 환경 등 **지원**

10 글로벌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0.8→ 0.9조원, +14%)

○ (필요성) 2030년 **바이오헬스 종합강국 도약** 지원

⇨ ❶ (신약개발) '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
❷ (의료기기) '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7위 달성
❸ (미래정밀의료) 글로벌 5대 선도국가(TOP 5) 도약

○ (협업내용) **국가신약개발**(1,380억원), **mRNA 임상지원**(172억원), 디지털 치료제 등 **혁신기술**(132억원) 등 **전주기 지원**

11 미래차 개발 및 보급 (2.0→ 3.4조원, +65%)

○ (필요성) **미래차** 통신·부품·센서·도로·신호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기적 지원 필요**

⇨ ❶'22년 자율주행차 Lv3 출시, ❷'27년 Lv4 완전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❸'30년 수소차 선도를 목표로 미래차 개발·보급 추진

○ (협업내용) **Lv4. 자율주행차**(1,204억원), **수소모빌리티 2.0**(206억원), **수소·전기차 보급 50만대 달성** 등 **기술·인프라·보급** 종합지원

12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 육성 (0.7→ 0.9조원, +31%)

○ (필요성) **"2030년 항공 G7 + 세계 7대 우주강국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협업내용) **기술개발**을 통한 **공공수요 창출 + 인력·금융지원** 등 **민간저변 강화**

13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1.2→ 1.6조원, +36%)

○ (필요성)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집행하여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 미스매치** 발생

○ (협업내용) 분야·수준별 **인력수급전망 + 부처간 인력양성 트랙 분담**을 통해 혁신인재 **11→ 16만명 양성**

신기술 (분야수)	주요 분야	'21년	'22년
❶ 디지털 (8)	AI, 클라우드, 5G·6G, 빅데이터 등	8.1만명	11.4만명
❷ 산업기술 (6)	로봇·드론,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등	1.4만명	2.3만명
❸ 미래원천기술 (3)	수소, 양자, 우주	0.1만명	0.15만명
❹ 환경·바이오 (3)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1.7만명	1.9만명
계 (20)	-	**11만명**	**16만명**

14 고등교육 신기술인재 양성 (0.6→ 0.7조원, +17%)

○ (필요성)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의 분절성 및 운영상 칸막이로 사각지대 등 비효율 발생

○ (협업내용) 부처별 전문성 + 교육부 제도 지원 ⇒ 효율성 제고

- AI, 녹색융합, 바이오 등 인재공급 부족 8개 분야 사업 확대
- 대부분 분야에서 부족한 중급(학사)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 + 규제완화* 연계 지원

*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학사 규정 완화, 교원 확보(일반재정 활용), 학자금 지원 등

15 위기아동 지원 (0.1→ 0.2조원, +58%)

○ (필요성)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학대, 보호종료, 입양 등 위기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필요

○ (협업내용)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부처간 분산되었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재정을 복지부로 일반회계 일원화

- 아동학대 투자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기간 3→5년 확대,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100만원) 신설 등 지원

16 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 서비스 강화 (18억원 신규)

○ (필요성) LTE 기반의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상황 공유 등 지능형 서비스 필요

○ (협업내용)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재난대응 관계부처 생산 영상정보(헬기·함정 등)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17 첨단무기분야 민군기술협력 (0.4→ 0.7조원, +75%)

○ (필요성) 국과연(ADD) 위주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산·학·연 기술활용 제약 + 민간의 국방R&D 수행 경험·역량 제고 한계

○ (협업내용) 민군 공동연구, 산학연 참여확대 등 국방R&D 개방

- 예컨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안보전략기술*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①탐지·통신 반도체, ②인공혈액제재, ③군용 전고체 이차전지, ④초고탄성 탄소섬유, ⑤150kW 수소-전기 추진시스템, ⑥고온항온 단조기술 등 6대 과제 +350억원

참 고 **'22년 17대 협업예산 주요내용**

1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0.2→ 0.7조원, +229%)

1 협업 필요성 : '22년 국산백신 상용화

○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공급부족·불균형 현상** 등을 겪으며, **글로벌 보건안보**로서 **백신 자주권 확보** 필요성 확대

○ 단기간 신속·대량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단기 대책**과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동시** 추진

⇒ ❶**'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❷**'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1년 9위)

2 협업체계 : 복지부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지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20.4월) 중심 **총력지원**

* (정부)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질병청
(민간)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미 파트너십, WHO, ADB 등 국제사회와 협력**도 지속

3 주요내용 : 생산 · R&D · 생태계 · 글로벌협력 4대 분야 지원

○ ❶**단기 생산역량 확충,** ❷**국내백신개발,** ❸**전문인력 등 생태계 조성,** ❹**글로벌 협력체계** 등 4대 분야 중심 **'26년까지 2.2조원 투자**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2,023**	**6,649**	○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229%)
○ 단기 생산역량 확충	110	531	- 백신 신속생산 확충,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R&D 및 특허지원, 백신기업 세제·제도·금융지원
○ 국내 백신개발 전방위 지원	1,136	4,172	- 임상3상 지원 등 비교임상 인프라 확충, mRNA 백신 개발 지원, 선구매 및 판로확보
○ 전문인력 등 생태계 조성	769	1,904	- 백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백신특구 확대 및 기존 클러스터 연계, 국가시설 확충 및 시설·기술 민간 개방
○ 글로벌 협력 및 공급체계 구축	8	42	- 백신유통관리 고도화, 글로벌 공동협력 강화

2 한류 연계 K-브랜드 수출 지원 (251→ 448억원, +78%)

1 협업 필요성 : 한류와 연계 新수출 전략 필요

○ K팝, K뷰티 등 한류의 영향으로 **전세계 한류 동호인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국제사회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새롭게 평가

○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붐업**에 따른 **연관 소비재 수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시 **콘텐츠 해외진출 및 한류확산 지원** 필요

* 한류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 증가
'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2 협업체계 : 문화(문체부) · 한식(농식품부) · 미용(복지부) · 제품(중기부) 등

○ (주관) **문체부,**
(협업)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등 5개 부처

* 한류협력위원회 활용(문체부장관 주재, 13개 부처 참여)

3 주요내용 : 4대 브랜드, 「기획-유통-마케팅-브랜드관리」 통합지원

○ **범정부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제품)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획-유통-마케팅-브랜드관리' 全단계**를 **통합지원**

- **문체부**는 **한류관련 행사 개최**를 총괄하고, 국내 **엔터사·제작사 및 방송사** 등 중개를 통해 **마케팅 지원**

- 농식품부·복지부 등 **개별부처**는 **분야별 지원기업·브랜드**를 **선정, 개별기업** 및 **해외유통 지원** 사업 수행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251	448	○ 전년대비 78% 증가
○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운영	8	63	- K-브랜드 해외홍보관 구축(1개국)
○ K-브랜드 한류 마케팅 지원	40	120	- 부처별 기업·브랜드 선정 → PPL 등 통합마케팅
○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123	110	- 한류 전분야 유망 IP 발굴
○ 부처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25	63	- 부처합동 한류박람회 공동개최(2회) 및 기업 참가지원
○ 한국문화축제	55	92	- K-팝 등 -K-컬쳐 페스티벌 개최(1회)

3 융합 ODA 2.0 (0.3→ 0.4조원, +22%)

1 협업 필요성 : ODA 투자 효율성 제고

○ **분절적 원조체계**(유·무상기관 이원화, 무상기관 다원화)를 극복하고 **수원국 관점**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합 ODA*** **실시**

* 융합 ODA는 복수의 사업 주체 및 분야 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원국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ODA 사업 형태

○ ❶**지원 규모 대폭 확대** + ❷**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적극 지원 + ❸기존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질적 제고** 등 **융합 ODA 2.0** 추진

2 협업체계 : 국조실 · 기재부 · 외교부 · 사업부처간 유기적 연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11월)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21.2월)을 계기로 **국조실·기재부·외교부·사업부처**간 **ODA시스템·기반 정비**

- ❶**사업발굴 단계**(N-2년)**부터 사전적 연계 협의** 활성화, ❷**정부-시민사회-기업간 연계·시너지 창출,** ❸사업기획 **현장성 제고 추진**

3 주요내용 : 102개 ODA 프로그램 지원

○ **융합 ODA 확산**을 위해 **규모·프로그램 수**를 **+20% 이상 확대 → 23개 부처, 102개 프로그램** 반영(기존 56개, 신규 46개)

-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디지털 분야** 및 **공공의료 보건 분야**에 **집중 투자***

*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프로그램 비중 : '21년 51.8% → '22년 63.7%(+11.9%p)
예산규모 비중 : '21년 55.9% → '22년 66.9%(+11.0%p)

- **수원국 만족도 평가**를 **신규사업 반영에 환류**하여, 만족도가 높은 **인프라-역량 강화** 사업 **집중 추진**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	85	3,248	102	3,952	○(프로그램) +20.0%, (예산) +21.7%
그린 분야	11	210	17	454	- 필리핀 홍수 예·경보(환경부+기상청 등)
디지털 분야	18	763	30	845	- 몽골 기상관측(기상청+외교부 등)
보건 분야	17	897	20	1,450	- 라오스 병원 건립(기재부+복지부 등)

4 사업재편분야 노동전환 지원 (0.4→ 0.8조원, +120%)

1 협업 필요성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집중지원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明과 노동집약·고탄소 산업의 정체·축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暗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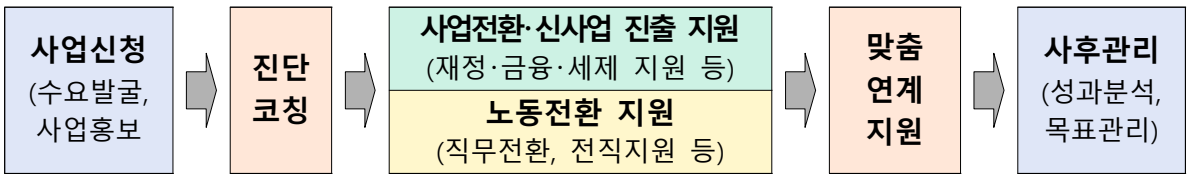
○ 특히 ❶내연기관 자동차·❷석탄화력발전 산업은 급격한 사업 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 예상 → 정책역량 집중 필요

❶ 자동차 업계	❷ 석탄화력발전
○ (현황) ❶완성차: 7개社 12.6만명 ❷협력사: 9천여개社 22만명 (미래차 생산기업은 2.3% 수준)	○ (현황) ❶발전사: 6개社 5,600여명 ❷협력사: 약 8,000여명 (충남 28기, 경남 14기 등 집중)
○ (전망) 내연기관 전용부품 일자리 감소 * 부품개수 : 내연기관차 3만개, 전기차 1.5만개	○ (전망) 58기 중 28기 폐지, 24기 LNG 전환 특히 소규모 협력사 일자리 감소

2 협업체계 : 선제적 재편기업 발굴 + 종합지원

○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재편기업 선제 발굴 + 범부처 종합지원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주관**) 기재부, (**협업**) 고용·산업·중기부, 금융·공정위 등
노동전환 지원분과: (**주관**) 고용부, (**협업**)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3 주요내용 : 재편분야 재직자 15만명 노동전환 지원

○ 사업재편 분야 재직자 등 15만명의 ❶직무전환(중장기 유급훈련 등)·❷전직지원(중장년 '새출발크레딧')·❸디지털역량 강화 등 중점 지원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3,739	8,220	○ 재직자 15만명 노동전환 지원(전년대비 +119.8%)
직무전환·전직훈련	441	2,311	-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2.5만명)
고용안정 및 전직·재취업서비스	290	478	-전직지원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평균 220만원) 지원(0.2만명)
디지털 역량 강화	1,640	3,823	- K-digital Credit(7만명), K-digital Training(2.9만명)
컨설팅 등 인프라	1,368	1,608	- 노동전환 지원센터(46억원), 노동전환 분석센터(11억원)

5 포스트코로나 자영업 구조전환 (0.5→ 0.6조원, +15.9%)

1 협업 필요성 : 「창업→폐업→또 창업」의 생계형 구조

○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나, **대부분**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도돌이표 **생계형 창업**** **계속**

* 자영업자 수(통계청) : ('19.2분기) 568만명 → ('21.2분기) 557만명 (△11만명)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19.5월) : 폐업 자영업자의 43.1% 재창업, 그 중 28.3%p 동일업종 창업

- 반면,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처간 유사·중복투자** 및 **전문화 미흡**으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 협업체계 : 폐업(중기부) · 직업훈련(고용부) · 금융(금융위) 등 연계

○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중심**으로 **고용부**(직업훈련), **금융위**(자금지원), **과기부**(ICT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전문역량** 활용

3 주요내용 : 생계형 구조 → 성장형 구조 전환

○ "**생계형→ 성장형 구조로 근본적 전환**"을 위해 ❶원활한 **폐업·유망분야 재취업**, ❷新사업 **창업·재창업**, ❸**디지털·스마트化** 등 종합지원

- (**폐업·재취업**) **폐업 前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교육*** 운영(중기부) + **일반적 직업훈련**(고용부) 등 **전문적 분업** 추진**

* (중기부) 취업교육 물량 1.3→ 1만건으로 축소하고, 특화교육 중심으로 내실화
(고용부) 폐업자의 직업훈련 지원(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실업자 일반직종훈련 등)

- (**창업·재창업**)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상담**(중기부)과 함께 **재창업 자금** 지원(중기부, 금융위) 등 추진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수요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특화 ICT 기술** 개발(과기부) → **소상공인에게 확산**(중기부)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소 계	4,962	5,749	○ **소상공인 약 9만명 지원** (전년대비 +15.9%)
폐업·재취업	476	585	-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자문 + 점포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1만명), 바리스타 등 폐업 前 경력연계 특화교육(1만명) 등 2만명
창업·재창업	310	484	- 재창업 패키지 교육(0.6만명)·사업화자금, 준비된 창업자(500명), 예비창업 청년 지원(100명), 강한 소상공인 선발 등 0.6만명
경쟁력 강화	4,176	4,680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5.3→ 6만명),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확대(0.6→ 0.7만명) 등 6.7만명 지원

6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77→ 104억원, +35%)

1 협업 필요성 : 스마트농업 급성장

○ 급성장 중인 **新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확산·발전**을 위해 부처별 추진 중인 **데이터, 플랫폼, 인력양성 협업 추진 필요**

*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규모('20, 마켓츠앤마케츠) : ('17) 138억 달러 → ('25년) 220(연평균 9.8%)

2 협업체계 : 데이터/플랫폼(과기부) · 보급(농식품부) 협업

○ **(농식품부)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계획 총괄 수립·이행**

○ **(과기부) 한국판 뉴딜의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농림축산**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지원

데이터		+	플랫폼		→	데이터기반 농업 보급	
농식품부	•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솔루션 개발·상용화 지원 • 데이터 저장·공개를 위한 시스템 유지 지원		농식품부	•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육성 관련 기획 협업		농식품부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조성 및 확산지원**
과기부	• AI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과기부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센터 육성			

3 주요내용 : 농업 현장 적합 모델 개발 + AI 경진대회 개최

○ **(데이터·플랫폼)** 수집·분석·활용 **단계별 데이터 통합 연계** + 민간의 분석 능력 활용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모델 개발**

○ **(실증 및 보급확산)** ❶**AI모델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❷**농업분야 AI 경진대회**(10억원) 추진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소계	77	104	○ 데이터분석 및 플랫폼운영을 통한 데이터기반 농업으로 전환 및 스마트농업으로 상용모델(23종)보급·확산
데이터·플랫폼	72	32	- 단기체감서비스 모델 개발(32억원) 및 알고리즘 분석(과기부 협업*) * 과기부 예산(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셋 및 빅데이터플랫폼) 예산활용
실증 및 보급확산	5	72	- 신규모델 23종 보급 및 농업분야 AI경진대회 개최

7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2.4→ 2.6조원, +9%)

1 협업 필요성 : 지역소멸 우려 확산

○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 감소**('20년) 및 **수도권 인구 50% 초과**('19년) 등 인구감소·**불균형** 심화 → **"지역소멸" 우려 확산**

* '20년 인구 전년 대비 2만명 감소, 수도권 거주 인구 전체의 50.2%(행안부)

○ **인구감소지역 지정**(~10월, 행안부)**과 연계**,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일자리, 교육·의료·복지·문화·일자리 등 **복합적 문제 대응 추진**

2 협업체계 구성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안부) · 분야별 지원(각 부처)

○ **행안부**는 ❶**인구감소지역 지정**, ❷**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수립** 지원

- **각 부처**(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는 **기존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책협력 추진**

3 주요 내용 : 일자리 · 정착 · 공동체 · 생활여건 · 기반 조성 지원

○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 → **정착** 촉진을 위해 **일자리, 교육, 생활인프라** 확충 강화

- (**일자리·경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확충**(2.6만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마중물 지원**
- (**입주·정착**) **청년자립형 마을**(연 12개소), **귀농·귀어 컨설팅**(191억원)
- (**공동체 활력제고**) **소통협력 공간 조성**(102→ 122억원) 등
- (**생활여건 개선**) **도시재생**(0.8→0.9조원), **접경·섬지역 LPG 인프라**(122억원), **문화취약지역 활력제고 프로그램**(46억원) 등
- (**기반조성**) 인구감소지역 계획수립 역량강화(20억원) 등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23,570**	**25,600**	○ 전년대비 +8.6%
일자리·경제	8,279	8,78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먹거리 마중물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입주·정착	1,109	1,194	- 정착 등 생활안정자금, 귀농·귀어 컨설팅 등 노하우 제공
공동체 활력제고	589	700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정주여건	13,553	14,785	- 교육·의료·생활인프라·문화 등 보강
기반조성 등	40	138	- 지자체 계획수립 역량강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등 제공

8 지역경제거점 도약, 혁신도시 2.0 (771억원, 신규)

1 협업 필요성 : 현재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

○ 혁신도시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기업과 사람의 '유입→정착→성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이전 공공기관의 수동적 역할**(지역기업물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 등)을 넘어 **적극적 역할**(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 수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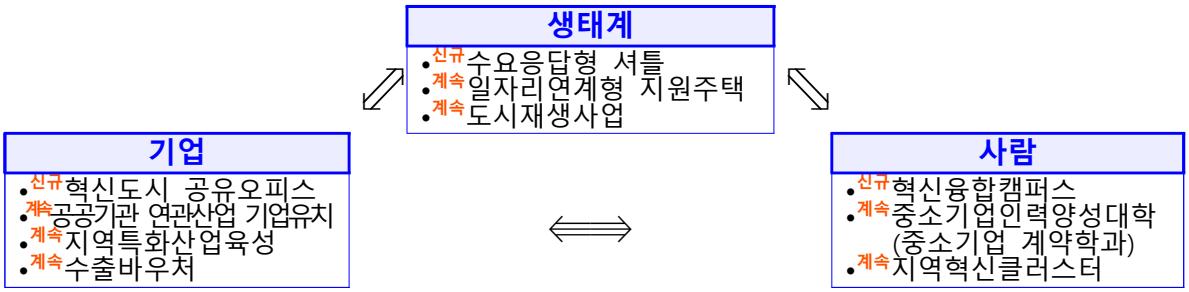
2 협업체계 구성 : 단계별 지원 유관부처(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등)

○ **혁신도시발전추진단**(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 ❶경제 생태계 조성(산업부·국토부) + ❷기업 성장(중기부·국토부·산업부) + ❸인력 양성(중기부·교육부)

3 주요 내용 : 기업·사람의 "유입→정착→성장" 을 위한 단계별 지원

○ 「혁신도시 2.0」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 10개 선정, 부처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 및 인재의 "유입→정착→성장"**을 **全주기 지원**



○ 지자체가 각 혁신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 제도**(5개부처 19개 사업, 공모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를 **신규 도입**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	771	「혁신도시 2.0」 신규로 지원(전년대비 순증)
생태계 조성	-	242	- 혁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응답형 셔틀 도입(11억) - 혁신도시-구도심 상생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170억)
기업 성장	-	153	- 기업의 창업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유오피스 구축(19억) - 기업들의 R&D 및 사업화(44억), 해외시장 개척(70억) 등 지원
인재 양성	-	377	- 공공기관 연계 캠퍼스 구축(25억) 및 중소기업 관련 계약학과 연계(5억) - 산학연 연계 오픈랩을 통해 재직자 현장기술 교육(347억)

* 브랜드 사업 중 계속사업은 현재 혁신도시 지원 중인 또는 '22년 지원 예정인 규모만 별도 분류

9 K-반도체 전략, 시스템반도체 지원 (0.3→ 0.4조원, +38%)

1 협업 필요성 :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 ❶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1위, ❷세계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및 ❸메모리반도체 초(超)격차 유지를 위한 **민관합동 투자** 지원

2 협업체계 : BIG3회의 중심 반도체 실무반 운영

○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중심으로 **❶창업~성장, ❷원천~상용 R&D** 이어달리기, **❸**석박사·학사·실무 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

* 반도체 실무반: (주관) 산업부, (협업) 과기부, 중기부 등

3 주요내용 : 기술개발 · 인력지원 · 기업지원 등 종합 지원

○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4대 핵심기술**(지능형반도체, AI반도체, 전력반도체, K-Sensor) 확보를 위해 **신규 R&D 투자 지원**(1,078억원)

* ❶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9 총 1조 96억원(예타), '22. 1,455억원)
❷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22~'28 총 9,924억원(예타), '22 509억원)
❸ 화학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사업('22. 58.2억원)
❹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22~'28 총 5,340억원(예타), '22년 153억)

○ **(인력지원)**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3.6만명 육성** 목표로 **융합·전문인력**(900명), **민·관협력 R&D 전문인력**(800명) 등 지원 확대(325억→409억)

○ **(기업지원) IP Bank*** **플랫폼**(33억원), 기업성장 환경**(53억원) 등 지원

* 반도체 IP(도면) 구매·활용 ** 설계 프로그램·서버, 시제품 제작·컨설팅 등 지원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3,220**	**4,441**	○ 전년대비 +37.9%
기술개발	2,239	3,217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PIM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K-Senosor 기술개발,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핵심프로젝트 지원
인력지원	325	409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육성(72→ 86억원, 330명) 반도체 소부장 기술인력 양성(40→ 60억원, 179명)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사업(12억원, 신규) 등
기업지원	656	815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96→ 160억원) 시스템반도체 IP BANK 플랫폼 구축 (33억원, 신규)

10 글로벌 혁신 신약 · 의료기기 개발 (0.8→ 0.9조원, +14%)

1 협업 필요성 : 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 바이오헬스는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개별 기업의 **도전이 쉽지 않으나***, 적극적 지원으로 **일부 성과 가시화****

* (**신약개발**): 평균 2조원/14년 소요 ↔ (**국내 제약사**) 연평균 영업익 0.1조원 불과

** **'21년 협업예산** (글로벌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
→ **신약 기술 수출** : ('18) 5.4→ ('19) 8.5→ ('20) 10.1→ ('21.上) 4.8조원+α

○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성공 등 **바이오헬스 종합강국 도약***을 위해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 ❶ (**신약개발**) '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
❷ (**의료기기 산업**) **'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7위 달성**
❸ (**미래정밀의료**) **글로벌 5대 선도국가**(TOP 5) **도약**

2 협업체계 : 연구(과기) · 임상(복지 · 질병청) · 허가(식약처) · 실증(산업)

○ BIG3 회의를 중심으로 **원천연구·임상·허가·실증** 등 **전주기 지원**

기초원천 연구	비임상·임상 지원	신속·동반허가 등	실증·상용화
(주관) **과기부** (협조) 복지부	(주관) **복지부·질병청** (협조) 산업부·과기부	(주관) **식약처** (협조) 복지부·질병청	(주관) **산업부** (협조) 복지부·질병청

3 주요내용 : 신약 · 의료기기 · 데이터 등 전주기 지원

○ (신약) **전주기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21~'30년 총 2조 1,758억원(예타), '22년 1,380억원), **mRNA 임상**(복지부·질병청 172억원, 신규) 등 반영

○ (의료기기)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등 **혁신기술 개발**(132억원, 신규),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년 총 1조 1,971억원(예타)) 등 지원

○ (데이터·규제·재생의료) **의료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위한 질병청·과기·환경부 등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978→1,079억원) 계속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투자
계	7,856	8,955	○ 전년대비 +14.0%
신약	3,713	4,461	-국가신약개발 ('21~'30년 총 2조 1,758억원, '22년 1,380억원) -mRNA 임상(복지부·질병청 172억원, 신규)
의료기기	2,415	2,390	-전자약 원천기술 개발(과기부·복지부 23억원, 신규) -자폐혼합형 디지털 치료제(313억원), XR핵심기술(75억원)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과학	1,728	2,104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질병청·과기·해수·환경 등 1,079원)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21~30년 5,955억원, '22년362억원)

11 미래차 개발 및 보급 (2.0→ 3.4조원, +65%)

1 협업 필요성 : '27년 완전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 ❶'22년 자율주행차 Lv3 출시, ❷'27년 Lv4 완전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❸'30년 수소차 선도를 목표로 **미래차 개발·보급** 추진

* 자율주행차 단계: (Lv1) 운전자 보조장치 → (Lv2, 現단계) Feet Off → (Lv3) Hands Off → (Lv4) Eyes Off

2 협업체계 : 통신(과기) · 부품(과기) · 도로(국토) · 경찰(신호) 등

○ 미래차 **통신 · 부품 · 센서 · 도로 · 신호**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기적 지원**

* (**산업부**) 부품 · 센서 등에 대한 기술 개발, 표준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과기부**) 통신, 보안, 주파수 분배 등, (**국토부**) 도로, 교통기술, 제도 개선 등
(**경찰청**) 신호체계, 교통안전 시설물 등, (**환경부**)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3 주요내용 : 기술개발 · 인프라 · 보급 전주기 지원

○ (**기술개발**) **Lv4. 자율주행차**(산업·과기 등 '21~'27년 총 1조 974억원(예타), '22년 1,204억원), **수소모빌리티 2.0**(206억원, 신규)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도심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수소충전 인프라** 기술개발도 **신규 반영**(산업·국토, '22~'25)

○ (**인프라**) 특장차 안전 ·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25억),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인증(신규, 97억) 등 지원 개발 추진

○ (**보급**)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2년 목표치(50만대) 달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23.6만대** 및 **수소·전기충전기 3.8만기 보급**(1.6→ 2.8조원)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투자
계	20,484	33,699	○ 전년대비 +64.5%
기술개발	2,674	3,861	- Lv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850→ 1,204억원) - 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수소충전 기술개발(19억원, 신규)
인프라	2,048	1,254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인증(산업부 97억원, 신규)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85억원)
보급지원	15,641	28,305	-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21. 4,416→ '22. 8,928억원)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21. 11,226→ '22. 19,352억원)

12 우주 · 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 (0.7 → 0.9조원, +31.2%)

1 협업 필요성 : 2030년 항공 G7 + 세계 7대 우주강국

○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 규모**는 **선진국 대비 저조**

* GDP 대비 항공우주산업 규모(IMF, '17년) : 선진국 1%, 한국 0.3%

○ **"2030년 항공 G7 + 세계 7대 우주강국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2 협업체계 구성 : 항공(산업부) · 우주(과기부) · 확산(각 부처)

○ **항공·우주산업 투자방향 설계**(산업부,과기부,기재부) 후, **부문별 전문성**에 따라 **항공**(산업부) + **우주**(과기부) **양 분과체제** 운영

3 주요 내용 : 공공수요 창출(기술개발) + 민간확산(인력 · 금융 등)

○ (**우주기술**)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빅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창출**** 등 도전적 기술개발 착수

* 과기부, 해수부, 국토부 등 공동 추진

** 과기부(주관) +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다목적 서비스 활용)

○ (**항공기술**) 정비부품, 완제기 성능개량 등 **부품·MRO 고도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무인기** 투자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 추진*

* 산업부(부품기술개발) - 국토부(인증기술개발) 연계 강화

○ (**인력양성**) **미래우주교육센터 신설**(우주분야 대학원 5개소) 하고, 초소형위성체계,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현장인력 교육지원**

○ (**금융지원**) 항공·우주분야 **신용·기술보증** 정책자금 0.25조원 지원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6,646	8,719	전년대비 +30% 이상 투자 확대 (+31.2%)
기술개발	4,978	6,733	
(우주산업)	3,134	4,742	- 위성체계 개발 및 서비스 확대, 발사체 고도화 등
(항공산업)	1,844	1,991	- 무인기·MRO·도심항공교통(UAM) 등
인력양성	1,132	1,384	- 미래우주교육센터 신설(우주분야 대학원 5개소)
금융지원 시장성강화	536	602	- 항공·우주산업 신·기보 보증(0.25조원) 등 금융지원(비재정), 및 우주탐사·UAM 조기상용화 등 민간저변 확대

13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1.2→ 1.6조원, +36%)

1 협업 필요성 : 20대 분야 인력 미스매치

○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집행하여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기업-구직자**간 **인력 미스매치** 발생

2 협업체계 : 인력수급 분석 + 부족분야 집중 지원

○ **분야·수준별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시급한 분야 집중 투자****,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즉시 활용가능한 인재** 양성

* 21-25년 부족인원(만명) : (디지털) 7.6 (산업기술) 5.9 (미래원천기술) 1.2 (환경·바이오) 10.3

** **특화사업이 없는 신기술 분야**는 K-Digital Training 등 **범용훈련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 **초·중급** 범용훈련은 **고용부·교육부**,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중·고급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하도록 **인력양성 트랙 內 역할 분담**

< 인력양성 트랙 예시(AI 분야) >

초 급	중 급	고 급
K-Digital Credit(고용부)	ICT 멘토링(과기부)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과기부)

3 주요내용 :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16만명 양성

○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21) **11만명**→ ('22) **16만명** 양성 (예산 +36%)

- **디지털** : ('21) 8.1만명(0.8조원)→ ('22) **11.4만명**(1.1조원), +37%
- **산업기술** : ('21) 1.4만명(0.1조원)→ ('22) **2.3만명**(0.2조원), +73%
- **미래원천기술** : ('21) 1,091명(450억원) → ('22) **1,455명**(571억원), +27%
- **환경·바이오** : ('21) 1.7만명(0.22조원) → ('22) **1.9만명**(0.26조원), +15%

구 분	핵심투자 (20% 이상 확대)	중점투자 (5%~20% 확대)	적정투자 (5% 미만 확대)
❶ 디지털 (8)	일반SW, 범용교육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IoT, 메타버스, 5G·6G
❷ 산업기술 (6)	시스템반도체, 범용교육	첨단소재	3D 프린팅, 이차전지, 지능형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❸ 미래원천기술(3)	양자, 우주	수소	-
❹ 환경·바이오 (3)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에코업, 범용교육	-

14 고등교육 신기술인재 양성 (0.6→ 0.7조원, +17%)

1 협업 필요성 :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혁신

○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의 분절성 및 운영상 칸막이로 사각지대 등 비효율 발생

○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 필요**

2 협업체계 구성 : 부처별 전문성 + 교육부 제도 지원

○ **신산업** 분야 **부처별 전문성 + 교육부 제도 지원*** ⇒ **효율성 제고**

*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학사 규정 완화, 교원 확보(일반재정 활용), 학자금 지원 등

3 주요내용 : 인재공급 부족 8개 분야 지원

○ 기존 **인력양성사업 현황, 인력수요전망,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재공급이 부족한 8개** 분야* **사업 확대**

* AI, 녹색융합, 바이오, 반도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 신기술 분야 **범용 인재양성 사업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기술분야에 유연하게 대응**

- **대부분 분야에서 부족**한 **중급**(학사)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신설**하여 **일반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연계 지원**

* '22년 600억원(9개 분야, 15개 사업, 4300명 인재양성 지원)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구성('22 신규) >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차세대반도체		스마트공장
미래자동차 (국토부)	자원개발 (산업부)	수소에너지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산업부)	이차전지 (산업부)	시스템반도체 (산업부)	AI 반도체 (과기부)	AI 제조 (중기부)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바이오**	**블록체인**	**녹색융합기술**	**범용**
의료 AI (복지부)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공간정보 (국토부)		바이오헬스 (산업부)	정보보안 (개인정보위)	디지털물산업 (환경부)	지식재산 (특허청)

(단위 :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투자
계	**6,055**	**7,067**	○ 전년대비 +16.7%
8대분야 인재양성	1,204	1,328	■ 수급분석을 통해 **8대 분야 인재양성 사업 확대**(AI, 녹생융합, 바이오, 반도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범용	4,850	5,739	■ 신기술 분야 **학사 및 석박사의 중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인재양성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 확대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4단계BK 21, SW 중심대학 등

15 위기아동 지원 (0.1→ 0.2조원, +58%)

1 협업 필요성 :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기아동

○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학대, 보호종료*, 입양** 등 **위기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을 퇴소한 지 5년 이내 아동으로 13,000명 수준

2 협업체계 구성 : 복지부 중심 경찰청·법무부 협力

○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복지부**를 중심으로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3 주요 내용 : 학대아동 재정일원화 등 지원

○ **(학대아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각각 분산되었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 아동학대 지원투자 적극 확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3→ 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 상향**(1:1→ 1:2)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17개 시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21.7월)

○ **(입양아동)** 입양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입양 前 **위탁보육가정에** 국고로 **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지원(19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1,242	1,960	전년대비 +57.8% 증가
학대아동	727	1,024	-보호강화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105→140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81→95개소) 확충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2,000→4,750명), 거점 전담의료기관(8개소) 신규 지정 등 치유·회복 강화
보호종료	515	916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확대(3→5년) -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액 적립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비율 상향(1:1→1:2)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신설(전담요원 120명 배치)
입양아동	-	19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비(아동당 월 100만원) 신설

16 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 서비스 강화 〔18억원 신규〕

1 협업 필요성: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상황공유 강화

○ **LTE 기반의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21.5월)하여, 유관기관 간 통신 **기본기능 서비스 개시**

○ **효과적인** 재난재해 **초동대응 및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현장상황 공유** 등 **수요자 중심·현장밀착형 지능형 서비스** 도입 필요

2 협업체계: 시스템 개발·운용(행안부) + 분야별 협력(각 부처)

○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재난대응 관계부처에서 생산한 **영상정보**(헬기·함정 등)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운영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 소방·구조·구급 분야 영상전송	+	• 해양경비·구조 분야 영상전송	+	• 치안·대민서비스 분야 영상전송	+	• 산불·산림서비스 분야 영상전송

↖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재난안전통신망 실시간 영상공유 시스템 개발·운영 총괄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기관 협의체 운영

3 주요내용: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 **'22년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처별 소요 반영**

(단위: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투자 방향
계	-	18	
영상공유 시스템 개발·운영	-	10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복합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행안부, NIA)
부처별 영상전송 체계	-	2	실시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경찰청)
	-	2	실시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소방청)
	-	2	실시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해경청)
	-	2	실시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산림청)

17 첨단무기분야 민군기술협력 (0.4→ 0.7조원, +74.7%)

1 협업 필요성 : 국방-민간 분야 R&D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 국과연(ADD) 위주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산·학·연 기술활용 제약**, 민간의 **국방R&D 수행 경험·역량 제고 한계**

⇒ ❶국방-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 연구개발·분업**, ❷우주·항공 등 **민간분야 우위기술 활용**, ❸국내 **방위산업·기업 역량 강화** 필요

2 협업체계 : 국방R&D(방사청) · 출연연(과기부) · 산업체(산업부) 등 연계

○ 국방R&D 주무부처(방사청)와 타 R&D 주요부처(산업·과기부) 간 **❶국방기술혁신협의체**(출연연) 및 **❷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체) 구성

3 주요내용 : 민간과의 공동연구, 산학연 참여확대 등 국방R&D 개방

○ (출연연 융합연구) **지능형 군집드론 운용기술, 착용형 센서** 등 **7대 분야 ADD+타정출연**(ETRI 등) **공동·융합 연구** 추진

○ (정출연 주관 개발) **소형무장헬기, 군용위성** 등 **민간전문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다부처 **정출연개발+ADD기술지원**(4개)

○ (산업체 참여 확대) **산업체 등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 대폭 확대

○ (민군협력) 국가 **안보+산업육성 파급효과**가 큰 **'국가안보전략기술***(6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등 민-군 협력 확대

* ①탐지·통신 반도체, ②인공혈액제재, ③군용 전고체 이차전지, ④초고탄성 탄소섬유, ⑤150kW 수소-전기 추진시스템, ⑥고온항온 단조기술 등 6대 과제 +350억원

(억원)

소분류	'21년	'22년	'22년 중점 투자 방향
계	3,934	6,873	전년대비 +74.7% 투자 확대
출연연 협업	**1,559**	**2,133**	
(출연연 융합연구)	**761**	**1,551**	7개 국방기술 분야 국방과학연구소-타정출연 간 공동 R&D
(정출연 주관 개발)	798	582	소형무장헬기, 군용위성,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등 4개 과제
산업체 협업	**2,375**	**4,740**	
(산업체 참여 확대)	1,467	3,150	산업체 등 주관 핵심기술 개발 과제 확대(신규 35개 → 112개)
(국가안보전략기술)	908	1,590	인공혈액제재, 초고탄성 탄소섬유 등 6개 과제 민군겸용개발

별 첨 | **분야별 재원배분**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 · 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돌봄격차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및 **건강한 노후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국민건강 투자** 확대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보강**

○ **기준중위소득 5.02%**(4인 기준)*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교육활동지원비 21.1%**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 기초생보 개별급여 전환('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가구 규모별 인상률 차등적용에 따라 1인 가구는 6.4%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45→46%) 등 **사각지대 해소**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5.3만 가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22년~, 11만명)

○ 질병 ·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263만명, 110억원)

* 취업자 약 120만명 대상 최저임금의 60% 지원(3개 사업모형 + 6개 지역)

○ **긴급복지 요건 완화***,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명 보험료 50% 지원 신설**(최장 1년) 등으로 생계 위기가구의 빈곤층 추락 방지

* 일반재산: (대도시) 1.88→2.41억원, (농어촌) 1.01→1.3억원 / 금융재산: 5→6백만원

□ **양질의 공적임대** 공급, **주거비 경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점 지원

○ **공적임대 21만호** 공급(19.7→22.9조원),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821억원, 최대 12개월) 및 **특화 융자***(0.25조원), **도심지 공급**** 등

*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월 20만원) 도입 및 中企청년 저리(1.2%) 보증금대출 연장(~'23년) 등

** 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지원, 주거특화형 도시재생 등(각 30곳, 신규 0.1조원)

□ **장애인 돌봄 확대, 한 부모가족** 및 **위기 아동 ·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지원 제도 보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 100→120시간), **중증장애아 돌봄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중위 120% 초과도 지원) 등 장애인가족 돌봄 부담 완화

○ **한부모가족 선정시 근로소득공제**(30%) 신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돌봄-교육-직업) 도입(1천명) 등 한부모 자립유인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3→5년) 및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 구축, 입약대상아동 **위탁보호비 신설** 등 **공적보호 강화**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 강화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83개월) →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

○ **영아수당**(월 30만원)·**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도입,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5대 패키지** 집중 투자

○ **임신 바우처 확대**(60→100만원, 청소년 산모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영아가정 방문 건강관리 확대** 등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를 지원

○ **기초연금 지원**(598→628만명, 월 30.15만원),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80→84.5만개, 사회서비스형 7만개) 등 **노인 빈곤 해소**

○ **노인 맞춤돌봄**(50만명), **디지털 돌봄**(8.4→12.7만명),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20→30만명), **고독사 방지 체계 구축** 등 **노인돌봄망 확충**

□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육성 지원**

○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의료원 신축** 등 지역거점병원 지원(1,433→1,657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지정**(총 5개소*, 266억원)

* 호남·충청·경남권 설계 중('22년 착공), 경북권 설계 예정('23년 착공), 추가 1개소 공모

○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11.0→12.2조원)

○ **코로나19 mRNA 백신 등 9천만회분** 구입(2.6조원) 및 **예방접종 시행비·물품**(0.6조원) 등 지원으로 **전국민 백신접종 뒷받침**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펀드 조성**(+500억원),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착수(+109억원) 등 **보건산업 발전기반 강화**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53,243	167,637	▪ 생계급여 +6,569억원, 의료급여 +4,428억원
▪ 취약계층지원	45,132	47,440	▪ 장애인활동지원 +2,335억원
▪ 공적연금	600,408	633,058	▪ 국민연금급여지급 +17,359억원
▪ 보훈	58,866	59,087	▪ 보상금 +1,382억원
▪ 주택	335,184	363,578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5,283억원
▪ 사회복지일반	13,710	9,402	▪ 사회복무제도지원 △2,342억원
▪ 아동·보육	85,582	90,949	▪ 영아수당지원 +3,731억원
▪ 노인	188,723	204,420	▪ 기초연금 지급 +11,506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12,001	13,753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46억원
▪ 고용	258,402	259,873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362억원
▪ 노동	92,595	99,578	▪ 산재보험급여 +6,227억원
▪ 고용노동일반	5,574	6,046	▪ 인건비 +263억원
▪ 보건의료	34,232	87,998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1,530억원
▪ 건강보험	107,688	118,242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8,992억원
▪ 식품의약품안전	6,086	6,426	▪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D) +95억원
합 계	1,997,427	2,167,486	8.5% 증가

〈참고〉 일자리 분야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확충

◇ 신기술 직업훈련,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 맞춤형 고용장려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지원

□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공공일자리 확대로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22년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등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 대상 구직급여 확대

- 플랫폼 종사자(20.1만명), 임시·일용직(42.9만명), 가사근로자(0.3만명) 보험료 신규 지원

-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8만명), 예술인 구직급여 확대(0.4→0.5만명) 등 실업시 생계지원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구직촉진 수당 지원 인원을 40 → 50만명으로 확대 (1.2 → 1.5조원)

* (소득) 중위소득 50 → 60% 이하, (재산) 3 → 4억원 이하

○ (직접일자리)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공공일자리를 101 → 105만명으로 확대 (3.2 → 3.3조원)

□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취약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신기술 직업훈련) 기업 참여 디지털 핵심인재양성(1.7→2.8만명), 중소기업 현장맞춤훈련(S-OJT) 등 기업주도 훈련 확대(0.2→0.5조원)

- K-Digital Credit(4→7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28→100만명) 등 디지털 기초교육 제공 확대

- AI+X·그린테크 등 폴리텍 학과개편, 직업계고 심화교육 확대(8→48개), K-Digital Platform 추가(5→20개소) 등 인력양성체계 강화

○ (**노동전환**) **저탄소·디지털화**로 인한 사업전환·재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직무전환 교육, 전직지원서비스** 등 **지원 강화**

- **재직자의 전직·직무전환 교육**을 위해 **유급휴가훈련**(1만명),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2.5만명) 등 **신규 훈련프로그램 지원**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0.5만명), **노동전환지원금***(0.3만명) **신설** 등을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기업이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근로자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고용장려금**)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민간의 고용시장 보완**

- **중소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시 年 **960만원의 장려금** 신설 (14만명)
- 과거보다 **고령자 초과 채용**시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장려금 신설** (0.6만명)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장애인 신규 채용시 월 50만원 장려금** 신설 (0.3만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등 감안, 일선 산업현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산재예방**)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원(1→1.3만개소) 및 **산재예방컨설팅 대폭 확대**(361→450억원)

○ (**근로환경**)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8개소) 등

(억원)

구 분	'21년	'22안	비고
▪ 직접일자리	30,894	33,037	▪ 노인일자리 84.5만개, 자활근로 6.6만개
▪ 직업훈련	23,340	25,674	▪ 내일배움카드 1.0 → 1.2조원
▪ 고용서비스	17,000	19,988	▪ 국민취업지원제도 1.2 → 1.5조원
▪ 고용장려금	80,935	78,011	▪ 고용유지지원금 1.4→ 0.6조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0.8 → 1.0조원
▪ 창업지원	24,176	29,582	▪ 창업기업융자 1.6→2.2조원
▪ 실업소득 유지·지원	125,090	126,933	▪ 구직급여 11.3 → 11.5조원
합 계	301,436	313,225	

2 교육 분야

◇ 저소득 초중고 및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완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저소득 **초중고생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지원 확대**, **직업계고생 취업·대학생 장학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노력 강화**

○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31만명)에게 학습교재 구매·EBS 콘텐츠 수강 등 목적의 **학습특별바우처**(年 10만원)를 **신규 지급**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 101억원('22신규, 국고 30% 지원)

- 우수한 **저소득층·도서벽지 학생**을 **선발**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수혜인원**을 **확대**

* 영재교육 지원사업 21억원(선발인원 516명→ 600명)

○ **취업 희망 직업계고생**이 **우수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신설**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725억원(약 3만명, 500만원 지급)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22신규 28억원(1,050명)

○ **저소득층·다자녀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 제로화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단가 인상**(+0.7조원)

* 기초·차상위(700만원/둘째 이상 전액지원) 5~8구간(390 ~ 350만원), 기준중위 200% 이하 다자녀 가구(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①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②**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재학중 대출이자 면제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역량 강화**

○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각부처의 전문성**과 대학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일반재정지원 결합**하는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 사업 신설**(600억원)

* 부처·대학의 정원, 학사제도 개선 요구 지원

○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에 맞춰 **3단계 유형으로 산학 연계 LINC 3.0사업 재설계**(4,070억원)하고,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후발대학 협력기반구축형

○ 지역 내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핵심산업 산·학 협업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개(1,710억원) → 5개(2,040억원)

○ **지자체-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고등직업교육거점을 육성**하고 **지역특화 인재양성** 및 **지역주민 맞춤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 지역기반협업형('21년 25개교 250억원 → '22년 30개교 405억원)

□ 全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추진***

* (평생교육바우처) 141억원(지원인원: 1.5→3만명)
(온국민 평생배움터) '22신규 35억원

○ **대학**의 **우수강좌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K-MOOC 콘텐츠**를 **강화**하고 **유망 기업**의 수요 맞춤 **온라인 교육과정도 확대**

* (K-MOOC) 신규강좌 대폭 확대(누적 1,055→1,255개) 및 해외 유명강좌 개설
(Match-業) 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누적 48→64개)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586,375	698,3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532,300→643,008억원)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943→6,075억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9,168→35,897억원)
▪ 고등교육	113,270	119,950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1,710→2,040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39,946→46,567억원) ▪ 대학혁신지원(6,951→7,950억원)
▪ 평생·직업교육	11,052	12,000	▪ 전문대학 혁신지원(3,660→3,880억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74→141억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1,669→1,725억원)
합 계 **(교부금 제외시)**	712,026 (179,776)	831,693 (188,686)	**16.8% 증가** (5.0% 증가)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를 위해 **세계일류 콘텐츠 제작, 신한류 기반 해외진출, 문화인프라 지원** 확대
◇ 국내관광 회복을 위한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저변 확대**

□ **세계일류 콘텐츠 양산**을 위해 **정책금융** 및 **차세대콘텐츠** 제작 지원

○ 콘텐츠분야 **모험펀드·완성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스포츠산업** 회복을 위해 **융자지원** 확대

* 모험펀드 2,200억원 조성, 완성보증 2,000억원 공급

○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223억원) 및 **OTT 플랫폼 - 콘텐츠 제작사 동반성장** 패키지 등 지원

* 인재양성(특성화대학) + 콘텐츠 기획·개발·제작(116억원) + 드라마펀드(500억원 조성)

□ **新한류활용 문화콘텐츠·소비재 마케팅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 지원

○ 한류기반 K-브랜드 확산을 위해 **해외홍보관, 한류마케팅, 합동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해외 문화행사와 연계한 '**코리아 시즌**' 추진

* 해외홍보관 1개소 45억원, 한류마케팅 50억원, K-컬쳐페스티벌 92억원
* '22년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 **예술한류**의 핵심분야인 **K-뮤지컬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공연** 및 **프로듀서 발굴** 등 지원(신규 20억원)

○ 미술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통채널**(아트페어 등) 참가 지원 확대(45→56건, 7→15억원)

□ **문화예술 창·제작·산업화**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코로나19로 창작여건이 악화된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 조성(신규 160억원)

○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창작준비금**(15→21천명) 및 **신진예술인 창작지원*** 확대(37→103억원)

* 미술작가 육성·패키지(①발굴(예비전속작가제, 비평 및 작가육성)-②진입 유도(작가미술장터, 미술품 대여·전시, 아트페어 성장지원)-③정착 공고화(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등

○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 북토큰** 지원대상 확대(194 →245만명)

○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 문화취약지역 활력촉진, 중앙-지방 협력기반 공연 창제작·유통** 지원(+196억원)

□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

○ 스마트 모빌리티·플랫폼을 통합한 '**스마트관광도시**' 확대(3→6개소, +124억원) 및 **관광빅데이터** 등으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관광빅데이터 +26억원(102→128): 여행예보서비스 등 맞춤형 관광 분석 서비스 제공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등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신용보증부 융자 2배 확대**(500→1,000억원) 등 영세관광업체 지원강화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60억원(20→80), 야간관광활성화(14억원, 신규)

□ **학습·일상생활과의 병행**을 통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종목별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적 목적 수행에 특화된 전문클럽**을 **지원**하고, **승강제 리그 지원 확대**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강화**

* 지정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106억원(신규), 승강제 리그 확대 +79억원(128→207억원)
유청소년 종목별 i리그 확대 +84억원(23→107억)

○ 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폐업위기에 놓인 스포츠산업 창업자 재기 지원 및 **전통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디지털사업화 지원**

*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26억원(신규), 스포츠산업펀드 확대 +110억원(130→240억)

□ 신기술기반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및 **문화유산 활용·향유** 확대

○ ICT기반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구축** 등 문화재 관리 효율화 및 **문화유산 산업 인턴쉽** 지원 등 문화재 관리인력 실무역량 강화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42억원(35→77), 문화유산 산업 인턴쉽 +24억원(신규)

○ 궁능원·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문화재 야행 +10억원(63→73),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실감형콘텐츠 구축 +17(신규)

(억원)

구분	'21	'22안	비고
▪ 문화예술	37,226	40,186	·아트컬처랩 조성(160억원, 신규), 창작준비금(+180억원) ·문화콘텐츠 수출기반조성(+176억원), 콘텐츠펀드(+589억원)
▪ 관광	14,998	14,423	·스마트관광 기반조성(132→256억원)
▪ 체육	17,594	18,013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1,119→1,322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130→240억원)
▪ 문화재	11,416	11,7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66→108억원)
합계	84,816	88,123	**3.9% 증가**

4 R&D 분야

◇ **한국판 뉴딜 2.0, BIG3, 우주·양자, 기초연구, 혁신인재** 등 중점투자분야에 **14조원 수준**의 **R&D 투자**

◇ R&D 예산 대폭 확대되는 만큼 **R&D 예산 효율화도 병행**

□ **한국판 뉴딜 2.0**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집중

○ (**디지털 뉴딜**) D.N.A 기술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및 메타버스, 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R&D 확대

* 소량 데이터 학습, 편향성·오남용에 대비한 신뢰성 확보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371억원, 신규),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21년 165억원→22년 259억원) 등

○ (**그린 뉴딜**) 全주기·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ICT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기술개발 등 지원

* 에너지수요관리(21년 2,140억원→22년 2,386억원),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기술(70억원, 신규) 등

□ **미래 주력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프론티어형 R&D** 투자 확대

○ (**소재부품장비**) 對일본 100대 + 對세계 85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 및 **65개 미래선도품목 R&D** 추진(2.15→2.27조원)

* 소재부품기술개발(0.71→0.84조원), 나노소재기술개발(0.20→0.24조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0.20→0.18조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0.10→0.11조원) 등

○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분야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을 위한 R&D 고도화(2.4→2.8조원)

- (**반도체**) **지능형메모리**(PIM)·**차세대전력반도체** 및 산업수요 특화 **첨단센서**(K-Sensor) 등 전주기 R&D 신규 지원(0.3→0.4조원)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891→1,223억원, 과기부 · 산업부)

- (**미래차**) **친환경**(전기차* ·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주행거리, 안전 등) **개선** 등 **글로벌 시장 리드**(0.39→0.47조원)

- (**바이오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지원 및 **감염병 대응 투자 강화**** 등 바이오분야 기술 고도화(1.76→1.86조원)

* 국가신약개발(452→1,384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1,903→2,038억원)
** 감염병 대응 R&D 투자(4,424→5,117억원)

○ (**프론티어형**) 우주, 양자, 6G 등 **미개척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 투자 확대**(0.5→0.7조원)

- (우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및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0.46→0.64조원)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신규, 1,728),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신규, 845), 초소형위성체계개발(신규, 257) 등

- (양자·6G) **양자컴퓨팅·센싱·통신, 6G** 등 미래 IT·NT의 **게임체인저 선점**을 위해 **투자 강화**(459→927억원)

□ **혁신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지속

○ (**기초 연구**) 우수·집단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 연구 등 **Two-Track**(**수월성-안정성**) **투자** 및 **도전적 과학난제 연구 지원**

  * (국정과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17년 1.26 → '22년 2.55조원)

○ (**혁신 인재**) AI 등 **수요가 높은 기술분야 특화***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글로벌·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AI) 산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38억원, 신규), 고난도·도전형 산학연 공동연구(21년 45억원→22년 100억원)

  ** 해외 유수대학에 국내 석박사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17.5억원, 신규),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지역산업 연계 교육(21년 7개→22년 12개 대학 지원)

□ **출연연 정비** 및 **R&D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예산 효율화

○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관별 미션·주요 역할**(R&R)은 고려하되, **경상경비 구조조정 통해 139억원 절감**(1,949→1,810억원)

○ 기관·사업별 분산되어 편성되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 통합 편성** 및 기획·평가·관리·인건비 등 **용도 중심으로 내역 개편**

- 전문기관(15개) 및 회계별(25개) 통합 편성 및 **경상경비**(간접비) **5% 감액** 통해 전년대비 **208억원 지출구조조정**(3,826→3,619억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 고
▪ 과학기술·통신 분야	89,688	96,262	· 개인기초연구(과기부)(14,770→16,283) · 한국형발사체고도화(-→1,728)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7,866	74,773	· 소재부품기술개발(7,109→8,410) · 창업성장기술개발(4,086→4,150)
▪ 교육 분야	24,368	25,156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4,904→5,190)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2,153→2,179)
▪ 보건·복지 분야	10,394	11,211	· 연구중심병원육성(440→529) · 국가신약개발사업(150→461)
▪ SOC 분야	10,137	10,809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73→375)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397→483)
▪ 기타 부문	71,553	79,795	·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817→854) · 문화기술연구개발(568→576)
합 계	**274,005**	**298,006**	**8.8% 증가**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전략산업 등 **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견조한 수출흐름 유지** 지원
◇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 폐업·재기 - 창업 - 성장**' **단계별 지원**

□ **전략산업, 스마트화, 신산업 육성** 등 **全산업 경쟁력 강화**

○ K-반도체, 미래차, 조선업 등 주요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자금,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

*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반도체 기술개발(0.3조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인프라(134억원) 등
(미래차) 부품업계 친환경차 투자자금(0.2조원, 신규), 친환경차 내구성자율주행 고도화(0.2조원) 등
(조선업) 중소 조선소 생산공정 자동화(28억원, 신규), 생산기술 인력 0.3만명 양성(132억원)

○ **10개 스마트그린산단 물류·관제·에너지 인프라 고도화**(0.14조원),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0.3조원)

□ 코로나19로 변화한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견조한 수출흐름** 지원

○ 마케팅·글로벌플랫폼 입점 등 **전자상거래 지원 확대**(5,807개사), 유망 중견기업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R&D(240억원) 등 지원

□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태양광·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금융·보급지원 대폭 확대***, 해상풍력 적합입지 검토, 실증기반 등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억원): ('20) 2,926 → ('21) 3,133 → ('22안) 3,324(+191, +6.1%)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억원): ('20) 2,820 → ('21) 5,340 → ('22안) 7,260(+1,920, +36.0%)

○ (**수소**)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구축(3개), **튜브트레일러**(16→80대) 및 **전문기업 지원 확대**(20→40개) 등 **생산·유통·활용 全주기 지원**

○ (**에너지효율**) 전력수요관리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

□ **스케일업, 글로벌화, 청년·지역창업 활성화** 등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 (**스케일업**) **비대면**(300개), **BIG3**(350개)·**그린뉴딜**(50개) 등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0.1→0.2조원)

○ (**글로벌化**)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 조성(200억원 신규출자)

○ (**청년·지역**) **폐업 청년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100명, 62억원), **非수도권 100개 기술 창업기업**에 **스케일업 자금** 신규지원

□ 소상공인의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위기극복**) '21년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소요 1.8조원** 보강 및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1.4조원) **공급**

○ (**폐업·재기**) 폐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1만명, 400억원), 취업교육과 함께 재창업 **사업화자금 2배**(1→2천만원) 확대 등(1.6만명, 502억원)

* 폐업컨설팅 신청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 지원

○ (**창업**) **新사업 창업자** 대상 교육·실습·자금을 지원(500명, 123억원)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원** 신규지원(29억원)

○ (**성장**)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6만명), 스마트기술 보급(7천개 업체),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융자 등 **디지털·스마트化** 지원(0.5조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무역 및 투자유치	11,519	9,136	·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39→170)
▪창업 및 벤처	44,617	46,552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500→4,7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17,970	127,68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18,436, 신규)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872	52,274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5,340→7,260)
▪산업혁신지원	55,893	57,315	· 소재부품기술개발(R&D) (7,109→8,410)
▪지식재산일반	3,472	3,546	· 특허 심사지원 (608→662)
▪산업금융지원	365	-	· 중소기업은행 출자 (△365, 순감)
▪산업·중소기업 일반	6,779	7,101	
합 계	**286,487**	**303,614**	

6 SOC 분야

◇ (고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 (**첨단화**) 주요 SOC 기반 시설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 (**생활밀착·국민체감 SOC**) 비대면·온라인 일상화에 대응한 **물류 서비스 스마트화,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확산** 등 세계선도형 K-City 구현

□ (**SOC 고도화**)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 **이동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수도권**) **장거리·대량통행**이 특징인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혼잡 완화**

-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 소요 차질없이 반영, **GTX-B · 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본격화

* (GTX-A) 1,233→3,309억원(공사비), (삼성~동탄) 988→1,300억원(공사비)
(GTX-B) 30→803억원(민자 설계 및 협상비 등), (GTX-C) 425→1,030억원(보상비)
(광역 BRT) 141(5개소)→156억원(5개소), (환승센터) 184(6개소)→175억원(13개소)

○ (**지방 광역 경제권**) **지방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광역 경쟁력을 제고**

-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11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 개시**

* 지방 광역철도 신규사업 : (3차 계획) 1개(0.5조원) → (4차 계획) 11개(12.1조원)

□ (**SOC 첨단화**) 철도·교량 등 **주요 인프라**에 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SOC 디지털 관리 강화**

○ 노후·외산 **철도신호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면개량, **터널·교량 IoT 센서** 장착 등 주요 기반시설 실시간 디지털 관리

*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 113억원(신규), (터널원격제어) 406 → 1,033억원('22년 50개소 운영, 27개소 추가구축)

○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新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미래교통 인프라** 지원 확대

* (차세대 차량통신(5G-NR-V2X) 기술개발) 53억원(신규),
(UAM 실증 인프라) 118 → 246억원 (UAM 그랜드챌린지, 전남고흥, '22년 완공)

□ (**생활밀착·국민체감형 SOC**)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물류 인프라 스마트화**로 체감도 높고 질 좋은 SOC 서비스 제공

○ (스마트물류) AI·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및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 확대

* 예) 노동부하 저감 적재기술 개발 등 '배송인프라 첨단화' 및 '물류운영 디지털화 기술 개발 등

○ (스마트시티)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의 **성과 확산** 및 **혁신기술 발굴·실증 강화**

* AI 데이터허브 등 국가시범도시 인프라 확충(291억원),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및 대·중소도시 실증·확산(834→1,176억원), 해외진출·인력양성 등 기반강화(27→58억원)

□ (**SOC 안전**) **건축·건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안전투자 강화

○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어린이집·양로원 등)에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확대(57억원→459억원, +3,532동)

○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21.5)을 뒷받침하고, **과적화물차 전담 단속원** 투입 등 안전 관리 질적 제고

* 건설기능인등급제: 등급제 시행에 따라 직종별·등급별 맞춤 교육 비용 지원(신규)
과적단속원 증원: 적재물이탈방지 조치여부 단속 등 전담단속원 +54명

(억원)

구 분	'21년	'22안	비고
○ 도로	77,829	84,302	· 도로건설(5.3 → 5.7조)
○ 철도, 도시철도	80,956	83,183	· 철도건설(5.0 → 5.2조)
○ 해운·항만	21,099	20,104	· 항만(1.64 → 1.57조)
○ 수자원	16,517	16,096	· 하천관리(0.8 → 0.7조)
○ 지역 및 도시	30,693	30,302	· 도시재생(0.8 → 0.9조)
○ 물류, 항공, 산단	37,996	41,296	· 산단진입도로(0.3→0.35조), 항공·공항(0.36→0.42조)
합 계	265,090	275,283	**+10,193억(+3.8%)**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농촌 공간정비·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지원
◇ **농어가 소득안정** 및 **취약계층 농어업인** 지원, **재해예방** 등 투자 강화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농어업 디지털化**
◇ **탄소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 등 지원확대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주·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21년) 5개소, 31억원 → (`22년) 45개소, 322억원(+939.0%)
** 농촌사회적경제서비스공급(`22년 신규, 10억원), 농업농촌RE100실증(`22년 신규, 18억원)

○ 청년 농·어업인 **영농정착지원금**('21: 2,000 → '22: 2,220명), **농지임대** 등 **농어촌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1년) 335억원 → (`22년) 382억원(+16.0%)
청년어촌정착지원: (`21년) 16억원 → (`22년) 17억원(+9.7%)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21년) 6,944억원 → (`22년) 7,323억원(+5.5%)

□ 농업·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지원하고 고령·여성·외국국적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강화**

○ 소규모 농어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생태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수산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2.4조원)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이상)를 통한 **고령농** 소득안정, **여성·외국국적**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

* 농지연금(융자): (`21년) 1,809억원 → (`22년) 2,106원(+16.4%)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22년 신규, 1.1만명, 24억원)
외국국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22년 신규, 2.3만 세대, 113억원)

○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완화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피해지원** 투자 확대

* 수리시설 개보수: (`21년) 6,365억원 → (`22년) 6,818억원(+7.1%)
** 재해대책비: (`21년) 1,000억원 → (`22년) 2,000원(+100.0%)

□ **농·축·수산업 全 과정**(인프라-생산-유통-수출)**에 걸친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어업 인프라** 구축

*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21년) 126억원 → (`22년) 330억원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22년 신규, 80억원)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APC 구축**, 농수산물 비대면 **유통·수출** 활성화 등 **ICT 기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스마트 APC 구축을 위한 ISP(`22년 신규, 5억원)
** 도매유통활성화 사업에 온라인 유통 결제자금 신설(`22년 신규, 300억원)

□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사태·산불 등을 위한 **재해지원 투자** 확대

○ **탄소흡수** 뿐만 아니라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열섬현상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21년) 2,338억원 → (`22년) 2,688억원

○ **산사태, 산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댐, 임도 건설 확대 및 산불 감시·진화**를 위한 산림청 헬기 1대 구입

* 사방댐: (`21년) 309개소, 1,628억원 → (`22년) 704개소, 2,267억원
* 임도: (`21년) 271km, 1,093억원 → (`22년) 371km, 1,382억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 고
▪ 농업・농촌	164,991	170,433	・농촌공간정비(+291), 지역특화형임대형스마트팜(+204)
▪ 수산・어촌	26,736	28,077	・어업지도관리 1,537(+833),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300(+290)
▪ 임업・산촌	25,899	27,338	・임도시설 1,382(+289), 사방사업2,270(+639)
▪ 식품업	8,931	8,30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4,029(+300)
합 계	**226,557**	**234,157**	**3.3% 증가**

8 환경 분야

◇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등 **'2050탄소중립' 이행 뒷받침**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기후위기 속 **홍수 예방 관리 강화**

◇ **미세먼지·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 '2050탄소중립', NDC 상향 등 대비, 탄소중립 이행 투자 확대

❶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83% 이상 차지('19년 기준)하는 **배출권 할당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 유도**

* 배출권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유연탄→LNG·바이오매스등) 지원(신규, 100억원)
* 배출권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80개소, 222억원 → 98개소, 879억원)

❷ **(모빌리티)**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2년 보급 목표**(수소+전기차 누적 50만대) **공급**

구 분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	총 20.7만대(승용차 16.5만대, 화물차 4.1만대, 버스 2,000대)	총 2.8만대(승용차 2.7만대, 버스 340대, 화물차 10대)
충전인프라	초고속 충전기 900기 급속 300기, 완속 37,000기	계속 32, 신규 68(승용 42, 버스26)

※ (최종 보급목표)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❸ **(탄소흡수원)**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등 **탄소흡수원 조성 확대**(신규, 35억원), 탄소흡수원 기능 통합평가체계 마련(신규, 13억원)

❹ **(녹색산업·금융)**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22년 녹색혁신기업 50개사, 에코스타트업 150개사 등) 및 **녹색 정책금융**(이차보전) 확대(신규, 143억원)

2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❶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지원 확대**(24→50개소),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장례식장)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54억원)

❷ **(재활용 확대)** **공공비축 시설** 추가('22년 2개소),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인프라 확충·현대화**로 잔재물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촉진

* 재활용품 비축시설(누적 6개소, '21년 259억원 → 누적 8개소, 누적 257억원)
*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21년 36개소 235억원 → '22년 39개소 257억원)

❸ (**처리 인프라 확충**)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 시설**로서의 **공공 열분해시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추진

*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신규, '22년 4개소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10억원)
*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신규, '22년 3개소 설계비 9억원)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기후위기 홍수 예방 관리 강화

○ (**먹는물 안전**) **적수·유충 재발 방지**를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노후 상수도 정비·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계속)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118개소, 412억원 → 계속 38개소 436억원)

○ (**홍수예보 고도화**) **수문조사 지점 확대**(286→344개), **홍수취약 지류하천** 대상 **소형 강우레이더**·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 소형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 설치(499→699억원),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108→183억원)

○ (**댐·하천 홍수대응**) 댐 스마트 안전관리(180억원), 댐 안전성 강화(744억원) 및 디지털트윈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6억원)

4 미세먼지·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4→36만대),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1,000대**) 확대 등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가속화

○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신규, 23억원**), 중소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신규, 300개소 80억원**) 등 지원 확대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 물환경	44,015	42,511	· 수질개선시설 사업군(16,192→16,782)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204→836)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1,913	14,364	· 스마트 그린도시(526→1,225)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30→360)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34,102	45,370	· 무공해차 보급(15,641→28,324)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519→1,221)
▪ 자연환경	8,317	8,953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232→435)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24→269)
▪ 환경일반	4,976	4,897	· 환경 청관사 관리(53→98) ·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5→34)
▪ 해양환경	2,834	3,181	· 연안정비(471→593) · 해양 및 수자원 관리(501→537)
합 계	**106,157**	**119,276**	**12.4% 증가**

9 국방 분야

◇ 첨단 핵심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 확대
◇ 국방운영 스마트화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 핵·WMD 대응, 군 구조개편 등과 관련, **첨단 감시·정찰**(2.3→3.2조원), **기동 화력**(2.9→3.2조원) 등 **핵심전력 지속 보강**

○ **미래戰 대비** 게임체인저급 **핵심·원천 무기기술개발, 민·군 기술협력 강화** 등 **국방R&D 대폭 확대**(4.3→4.9조원)

○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인력구조 정예화를 차질없이 지원**

- **현역을 전투임무로 재배치**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무원 증원**

* 부사관 +937명(363억원), 군무원 +4,566명 증원(656억원)

□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국방운영 스마트화 및 장병 사기진작**

○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적용된 훈련장비 도입 및 훈련장 조성으로 **교육훈련체계를 과학화**(1,055→1,834억원)

* 마일즈장비 29→38식, VR 가상모의훈련체계 13→22식, 과학화훈련장 신규 4개소

○ **병 봉급 '17년 최저임금의 50%, 11.1%** 인상(병장 기준, 60.9→67.6만원)

○ **급식단가를 25.1%** 인상(1일 8,790→11,000원), **민간조리원 확대**(+910명)

○ **장병3 : 정부1** 비율로 매칭하여 **전역시 최대 1천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신규, 2,165억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 고
▪ 방위력 개선	169,964	173,365	· 첨단 감시·정찰(23,009→31,735억원, +37.9%) · 기동화력(28,581→31,812억원, +11.3%) · 국방 R&D(43,314→ 48,841억원, +12.8%)
▪ 전력운영	358,437	378,911	· 국방 AI·SW 핵심인재 100명 양성(55억원, 신규) ·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608,500→676,100원, +11.1%) · 급식단가인상 (8,790→11,000원, +25.1%) · 사회복귀준비금 (신규 2,165억원)
합 계	**528,401**	**552,276**	**4.5% 증가**

10 외교·통일 분야

◇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융합ODA 확대 등 국익 증진 외교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대국민 통일행정서비스 강화

□ 다자외교·중견국 외교강화로 **'24~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10억원), **수교기념 행사 확대**(+46억원) 등 **국익추구 외교** 지원

○ 출국 수요 정상화 대비 **여권 제조·발급**(+210억원, 590만권) 및 **여권 민원 홈페이지·시스템 개선**(+53억원) 등 **외교 행정서비스 강화**

○ 해외 체류 시 위기상황 대비 **긴급대피**(+10억원), **무자력자 긴급지원**(+4억원) 등 **재외공관 활용 자국민 보호** 영사조력 확대

* 재외국민 보호(139 → 145억원), 사건·사고 전담 행정직원 (50→60명) 등

□ **그린·디지털·보건, 융합 ODA 중심**으로 **전략적 ODA 투자를 확대**하고,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COVAX AMC 1억불**도 차질없이 **공여**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그린·디지털·보건 ODA 강화**(1.0→1.2조원), WFK 해외봉사단 등 **청년들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538→797억원)

○ **원조 효과가 큰**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및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인프라-역량 강화 유형 중심으로 **융합 ODA 확대**(0.3→0.4조원)

* 그린·디지털·보건 융합 ODA : ('21) 1,816억원 → ('22안) 2,642억원(+45.4%)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대국민 통일행정서비스 강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311억원, 신규) 및 **체계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 기반** 구축·운영(12억원, 신규)

○ **DMZ 평화의길 인프라 조성, 통일⁺센터** 확대, **통일정보자료센터** 및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추진 등 **'대국민 통일행정서비스'** 강화

* DMZ 평화의길 인프라조성(64억원), 지역 통일⁺센터 추가(경기, 충청) 설치(24억원)
* 통일정보자료센터(`22년 32억원),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22년 12억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 고
▪ 외교·통상 부문	41,958	44,950	· 대개도국차관(ODA)(12,582→14,134)
▪ 통일 부문	15,079	15,336	· 남북협력기금(12,456→12,694)
합 계	**57,037**	**60,286**	**5.7% 증가**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범죄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 역량 강화**
◇ **재해예방·국민생활안전**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대상 **신종범죄 초기대응-상담·조사-법률지원 등 인권친화적 전주기 사법지원체계** 개편

○ **(범죄대응)** 보이스피싱, 몸캠, 스토킹 등 **범죄 초기대응**을 위해 **위장수사**, 보이스피싱 **전파탐지** 및 **디지털증거 분석** 등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위장수사(신규 3억원), 보이스피싱 전파탐지기(신규 10억원)
* 디지털증거분석실(신규 9억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0.3→1.0만대)

○ **(상담·조사)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장애인 전용조사실 확대**(35→50개)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강화**

* 경찰청 전용조사실(35→41개, +4억원), 검찰청 전용조사실(신규 6억원, 9개)

○ **(법률지원)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등 피해자 **진술조력** 및 **국선변호 확대**(3.1→3.8만)

* 피해자 진술조력(11→14억원), 국선변호(69→92억원)

□ **비대면 전자접수, 인공지능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24시간 **법률구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디지털 경제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인·장애인·일용직 등 방문이 어려운 **법률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개선**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신규 14억원),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5→18억원)

□ 과밀수용 해소,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 **수용시설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23년까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810명분) 및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설치

* 수용공간 증축·리모델링(468→526억원), 공기순환장치 설치(신규 86억원)
* 장애인 편의시설(신규 13억원), 미결수 구치감 환경 개선(신규 5억원, 20개소)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관련 **수사인프라** 및 **경찰관 역량 강화** 지원

○ **(수사 인프라) 수사 물량 증가**에 따라 **문서 등 관련 자료 폭증**에 **대비**해 **수사자료 생산·보관·관리 관련 인프라 지원**

* 수사기록 등본용 복사기 : ('22안) 35억원 (신규)
* DNA감정장비 보급: ('21) 12 → ('22안) 17억원
* 통신기록 신속수사 시스템 : ('21) 0.2 → ('22안) 6억원

○ **(경찰관 교육) 수사권 확대, 신종범죄 증가, 피의자 인권보호**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 확대**

* 과학수사교육용 프로그램 도입 : ('22안) 3억원 (신규)
* 교육시설 원격강의 인프라 확대(동시접속 1,000→4,500명)

□ **재해예방 투자·국민 생활안전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재해위험지역정비 : ('21) 5,397 → ('22안) 6,070억원
* 국가하천정비 : ('21) 3,523 → ('22안) 4,100억원

○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등 국민 3대 생활안전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소방·해경 등 **재난 대응장비 고도화**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20) 0.4 → ('21) 0.8 → ('22안) 0.8만개
* 산업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 ('21) 7,441 → ('22안) 8,031억원

(억원)

구분	'21	'22안	비 고
▪ 법원 및 헌재	21,788	21,811	· 국선변호료지원 (615)
▪ 법무및검찰	42,246	44,764	· 국가배상금 (2,500)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392)
▪ 경찰	123,723	126,202	· 치안활동지원 (4,819)
▪ 해경	15,779	17,085	· 함정건조 (1,373) · 함정유류관리 (945)
▪ 재난관리	19,513	13,894	· 재해위험지역정비 (6,070)
합계	**223,050**	**223,755**	**0.3% 증가**

〈참고〉 안전 분야

◇ 기후변화 대비 **예방투자 확대** 및 **디지털 기반 대응역량 강화**
◇ **국민 생활안전** 중점 투자 및 **대형·복합재난 대응장비 고도화**

□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산림재해·지진** 등 **예방투자 확대**

○ 풍수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5→55개소),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1.0→1.1조원) 등 지속 추진

○ 산사태·산불 등에 대비, **사방댐 건설**(390→704개소) 및 **산불 진화용 임도**(271→371km) 설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5,000개소) 등 지원

○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신규 16억원), **지진 훈련시설 및 비축기지 구축**(5→71억원) 등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역량** 강화

○ **AI기반 빅데이터 홍수예보 시스템**을 지속 구축(신규 30개소)하고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 신규 지원(31억원)

○ IoT 센서를 기반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170개소) 및 **둔치주차장**(40면 이상)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90개소) 설치

○ **댐 스마트 안전관리**(180억원) 및 **디지털 트윈 댐-하천 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6억원) 등 디지털 기반 국가하천·댐 관리시스템 지원

○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현장·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시범사업***(신규 18억원) 추진

* 행안부, 소방청, 해경청 등 다부처 협업 과제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분야**(자살·정신건강,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중점 투자**

○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 1393 인력을 확충**(+23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228→245개 지역)

○ **위험도로 개선** 사업 지속 추진(1,486→1,549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22년 완료 소요*(1,442억원) 지원

* '20년 0.4 → '21년 0.8 → '22년 0.8만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라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등 전면교체**20,112개소*) 및 특고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 미인증 3대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교체(5,192개소, 0.3조원)
끼임·추락방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융자(14,920개소, 0.5조원)

○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불연성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430→3,532동)

□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비, **재난대응장비 고도화** 지원

○ 국가항만 대규모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선박 건조** 지원(178억원) 및 악천후 등 소방헬기 안전확보를 위한 **열상광학장비 확충**(18억원)

○ 수중구조 등 **고위험·대형 해상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구조장비** 도입 지원(21→41억원)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5,915	6,765	· 침수, 붕괴 등 위험지역정비(6,070) 우수저류시설 설치(695)
▪ 댐 유지관리	741	805	· 스마트댐 안전관리(180)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37,007	39,195	· 교통안전(27,941), 산재예방(10,793), 자살예방 등(461)
▪ 산재예방 시설보강	7,441	8,031	· 미인증 위험기계 등 교체 5,192개소 · 끼임·추락방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14,920개소
▪ 화재안전성능보강	57	459	·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 3,532동
합 계	**205,691**	**213,230**	**+3.7% 증가**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지방소멸 대응·공동체 회복** 등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 **재정금융·정부자원관리**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지방소멸 대응·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주거·통신 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제공, 접경·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투자 확대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22) 7,500억원(순증) / 접경섬지역 LPG인프라 ('22) 122억원(순증)

○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등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21) 102 → ('22) 122억원(+19.6%)

○ **교부세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지역사랑상품권 등 **한시사업**은 **단계적 정상화**

* 지방교부세 ('21) 51.8 → ('22) 63.4조원(+11.6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 10,522 → ('22) 2,403억원(△77.2%)

□ 디지털·그린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은 뉴딜펀드 확충** 및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 뉴딜펀드: ('21) 5,100억원 → ('22) 6,400억원 (+25.5%)
** 청년희망적금: ('22) 476억원(순증)

□ **공공부문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환**,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가속화**

* 공공부문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환: ('21)570억원 → ('22)2,402억원 (+321.3%)
* 디지털 서비스 개방: ('21) 6억원 → ('22) 32억원 (+413.8%)

(억원)

구 분	'21	'22안	비고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557,303 (39,757)	652,754 (19,080)	· 지방교부세(51.8→63.4조원)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0.75조원, 순증)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1→0.2조원)
▪ 입법 및 선거관리	11,009	15,824	· 대통령선거관리(171→2,664억원)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68억원)
▪ 재정·금융	229,893	246,647	· 뉴딜펀드(5,100→6,400억원) · 청년희망적금(신규, 476)
▪ 정부자원관리	12,690	13,589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570→2,402억원)
합 계	**846,766 (329,219)**	**968,065 (326,891)**	**14.3% 증가 (교부세 등 제외시 0.7% 감소)**